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4·3 진상규명의 추이와
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양 유 석

2018년 8월

제주 4·3 진상규명의 추이와 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

지도교수 양 정 필

양 유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양유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6월

The trends in the truth investigation of Jeju
4·3 and change in descriptions of history
subject

Yang, Yu-Seok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eong-pi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8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과 목표	5
II. 4·3 진상규명운동과 교과서 서술의 변화	7
1. 진상규명운동 이전 반공주의적 4·3 서술	7
2. 진상규명운동과 4·3 서술의 변화	23
III. 4·3 공인 이후 교과서 서술의 경향	40
1. 진상규명을 둘러싼 갈등과 4·3 서술의 퇴보	40
2. 진상규명의 결실과 4·3 서술의 다양화	55
V. 결론	76
참고문헌	80
<Abstract>	84

<표 목차>

<표 1> 제2차~제4차교육과정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10
<표 2>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1987년) <근·현대사>	15
<표 3> 제5차교육과정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17
<표 4>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현대 사회>	21
<표 5> 제6차교육과정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22
<표 6> 제7차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영역별 내용」 및 「한국 근·현대사 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	29
<표 7> 제7차교육과정 천재·중앙·법문사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31
<표 8> 제7차교육과정 두산·금성·대한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34
<표 9> 제7차교육과정 근현대사 교과서 제주 4·3 서술의 특징	39
<표 10>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45
<표 11>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법문사·비상·삼화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48
<표 12>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미래엔·천재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51
<표 13>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제주 4·3 서술의 특징	54
<표 14>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61
<표 15>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63
<표 16>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리베르·지학사·두산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65

<표 17>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비상·미래엔·금성·천재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67

<표 18>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제주 4·3 서술의 특징
..... 71

I. 서론

1. 문제의 제기

30여 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갈등을 맞이하였다. 다양한 이념의 대립이 일어나는 혼란기가 시작된 것이다. 국민들은 어떤 이념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각기 분열되었으며 수많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이념대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화되었다. 단순한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을 적이라 규정하였고, 남과 북이 분단되는 비극적인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다. 그러한 와중에 대한민국 남쪽 끝 제주도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제주 4·3이다.¹⁾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²⁾이라고 정의한다. 약 8년의 기간 동안 이념의 대립 속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고 많은 중산간 마을이 사라졌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제주도는 빨갱이의 섬이라는 낙인으로, 제주 4·3은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오명 아래 아픔과 상처를 겪었다. 그 후 4·19혁명이 일어나며 제주 4·3을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하려는 노력이 일어났지만 진상조사 책임자를 제주 4·3 당시 토벌책임자로 정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뒤이어 일어난 5·16 군사정변은 제주 4·3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음지로 가라앉게 하였다. 이로써 제주 4·3은 오랜 시간 동안 금기시 되어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사

1) 제주 4·3의 명칭에 대해서는 폭동이라는 주장과 항쟁이라는 주장 등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사건이라고 기록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최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 4·3’이라고 지칭하려 한다.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536쪽.

건으로 남게 되었다.

제주 4·3은 1980년대 중·후반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다시 양지로 나올 수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사건에 대한 많은 연구와 함께 새로운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 4·3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제주 4·3이 단순한 이념의 차이를 넘어 당시의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대립이 발단이 되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그 시대의 혼란한 사회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 사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제주 4·3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 4·3 교육은 『순이삼촌』과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서나, ‘지슬’과 같은 영화, 혹은 제주 4·3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및 강연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역사교과서를 통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교과서가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력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교과서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을 배우며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 기억에 가장 깊이 남는다. 그러므로 역사교과서에서 제주 4·3에 대한 올바른 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 4·3의 역사교과서 서술은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제주 4·3에 대한 서술이 과거 공산주의자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편향적인 관점에서 국가폭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기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상반된 시각 차이가 극명한 사건이다. 이 점으로 볼 때 당시의 사회적 인식 및 성과 등에 따라 제주 4·3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주 4·3 서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려 한다. 제주 4·3에 대한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분석한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

명의 변화와 교과서를 연결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은 없었다. 진상규명과정은 제주 4·3의 성격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변화에 따라 제주 4·3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우선 진상규명과정과 역사교과서를 통시대적으로 분석하면서 제주 4·3에 대한 서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올바른 제주 4·3 교육을 위해 앞으로의 역사교과서에서 제주 4·3 서술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려 한다. 이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제주 4·3의 변화를 파악하여 제주 4·3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동시에 더 나은 제주 4·3 역사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제주 4·3을 역사교육적인 측면으로 연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한국현대사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주 4·3을 고찰한 연구이다. 이러한 유형은 현대사 전체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제주 4·3을 언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주 4·3은 매우 간략하게 다루어졌다.³⁾

두 번째 유형은 제주 4·3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제주 4·3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박찬식의 연구⁴⁾는 제주 4·3에 대한 인식서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중

3) 손숙, 「국사 교육 과정의 개편과 근·현대사 서술 내용의 변화」,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중석, 「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 문제 많다」, 『역사비평』56, 역사문제연구소, 2001, 148~184쪽 ; 서중석, 「한국교과서의 문제와 전망-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16, 한국사연구회, 2002, 131~161쪽 ; 박태균 외 2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 『역사교육』92, 역사교육연구회, 2004, 274~284쪽 ; 정병준, 「한국근현대사교과서의 현대편 분석」, 『한국역사연구회 웹진, 역사시평』23, 2004 ; 임하영,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변천과 쟁점」, 『한국근현대사교육론』, 선인, 2005, 45~77쪽 ; 신익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 현대사 쟁점 비교분석을 통하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득중,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서술 분석」, 『4·3과 역사』8, 2008, 205~247쪽 ; 박진동, 「해방후 현대사 교육 내용 기준의 변천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학보』205, 역사학회, 2010, 37~75쪽 ; 박태균, 「한국현대사의 논쟁에 대한 재평가와 교과서 수록 방안」, 『역사학보』205, 역사학회, 2010, 77~117쪽.

4)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4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70~197쪽.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신문자료를 통해 어떻게 제주 4·3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지 서술하였고, 교육과정변화와 그 교과서 내용에서 어떻게 제주 4·3이 서술되었는지를 소개하였다. 조한준의 연구⁵⁾는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제주 4·3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주 4·3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 4·3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하여 학생들이 역사교과서를 통해 제주 4·3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면회의 연구⁶⁾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제주 4·3 관련 서술을 분석하였다. 그는 제주 4·3 교과서의 서술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제주 4·3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과서 서술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도면회의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제주 4·3 서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연구 모두 제주 4·3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틀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제주 4·3을 교육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 연구는 공통적으로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보다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 특정한 관점이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제주 4·3 서술분석을 통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주 4·3을 주제로 교과서를 가장 세밀하게 연구한 것은 한철호의 연구⁷⁾를 들 수 있다. 한철호는 제주 4·3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4·3에 대한 『한국근현대사』와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경향과 구성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등을 더욱 신중하게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집필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되, 최근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제주 4·3에 대한 서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자들은 학생들이 역사를 다양한

5) 조한준, 「역사과 교육과정 내 제주 4·3관련 내용 분석」, 『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 4·3 집필기준안 연구 발표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37~49쪽.
 6) 도면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 관련 서술 분석」, 『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 4·3 집필기준안 연구 발표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51~76쪽.
 7) 한철호,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사학연구』103, 한국사학회, 2011, 209~249쪽.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단체들과 교류를 통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제주 4·3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철호는 또한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⁸⁾ 이에 따른 연구 결과 그는 향후 제주 4·3의 집필방향을 건의하였다. 한철호는 제주 4·3을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라는 수단을 통해서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제주 4·3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한철호의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교과서를 분석하는 관점을 들 수 있다. 교과서를 서술하는 데는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 및 성과가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 한철호가 교과서 서술을 분석할 때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제주 4·3은 진상규명의 변화가 사회적인 인식 및 성과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교과서의 서술변화를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교과서 서술 변화의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주 4·3 서술의 개선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연구방법과 목표

본 연구는 제주 4·3 진상규명의 변천과정과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주 4·3 서술 변화를 분석하려고 한다. 제1차교육과정부터 2009·2011개정 교육과정까지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당시의 제주 4·3과 관련한 진상규명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 분석 및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서술되지만 세부적인 서술은 집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며, 집필자들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8) 한철호,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사건 서술과 집필 방향」, 4·3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제주 4·3사건과 세계의 제노사이드 현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제주연구원, 2018, 144~162쪽.

통해 교과서를 서술한다.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통해 당시 제주 4·3의 인식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교과서 서술에서 당시의 사회 인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진상규명과정은 제주 4·3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교과서를 분석한다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제주 4·3 서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II장에서는 진상규명이 조금씩 진전되는 사회적 배경에서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서술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는 제주 4·3에 대한 사회인식이 대부분 폭동으로 여기는 시기부터 점차 인식이 변화하는 때이다. 그러한 경향은 교과서에서 서술되는 제주 4·3에 대한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과거에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고 서술되던 것이 시간이 지나 사회인식이 바뀌면서 조금씩 그 내용에서 진전이 일어났다. 또한 제7차교육과정에서 제주 4·3 관련 서술이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진상규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 제7차교육과정부터 생겨난 부분적인 검인정체제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등장한 영향 때문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났으며 역사교과서의 일부나마 검인정체제로 인해 하나의 교과서가 아닌 여러 개의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로써 제주 4·3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나타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진상규명이 공식화 된 이후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서술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부터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진상규명을 통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과정과 더불어 제주 4·3 관련 서술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2007·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근현대사 교과서가 사라지고 한국사 교과서가 등장하는데 본격적인 검인정체제 하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제주 4·3 서술이 시작된다.

제주 4·3은 과거에 비한다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으며 갈등 역시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주 4·3에 대한 서술 및 인식변화를 통시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역사교과서에서 바람직한 제주 4·3 서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제주 4·3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4·3 진상규명운동과 교과서 서술의 변화

1. 진상규명운동 이전 반공주의적 4·3 서술

1) 4·3 연구의 부재에 따른 교과서의 4·3 서술

제주 4·3이 1954년 종료된 후 많은 사람들은 제주 4·3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특히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제주 4·3을 직접적으로 진압한 주체였기 때문에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은 거의 전무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자 그때부터 제주 4·3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상규명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고순화 등 제주대 학생 7인은 1960년 5월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모집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처벌, 희생자들을 위령할 것 등을 정부와 제주도민에게 호소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제주도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도민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뒤이어 모슬포 ‘특공대 참살사건’ 규명 운동 등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제주 4·3의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회가 양민학살사건 조사단을 제주 현지에 파견하자 제주신보는 4·3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지방의회에서도 급히 조사활동을 의결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⁹⁾ 물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들도 많지만¹⁰⁾ 제주 4·3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태동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뒤이어 일어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제주 4·3의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중단되었다. 무엇보다 국가에 의해 제주 4·3에

9) 박찬식, 「4·3진상규명운동의 태동과 좌절」,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평화재단, 2017, 81~102쪽.

10) 제주 4·3 당시 사건의 토벌자였던 사람을 책임자로 정하는 등 공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가 어려운 구조였다. 가해자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대한 논의 자체가 당시에 있었던 반공법, 국가보안법, 연좌제 등의 구도 하에서 발설조차 힘들어지는 등 제주 4·3은 어둠 속에 묻히게 되었다.¹¹⁾ 사회적으로 논의가 일어나던 구조에서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사건에 대한 언급이 불가능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주 4·3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정도로만 제주 4·3은 언급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반공주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 4·3에 대해서도 반공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하였다. 제주 4·3 진상규명운동 관련자들은 용공분자로 몰아 처벌되었으며, 백조일손묘역이 파괴되는 등 제주 4·3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¹²⁾ 제주 4·3에 대한 언급 및 각종 활동이 모조리 중단되었으며 제주 4·3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독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던 제주 4·3 진상규명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제주 4·3을 전후한 시기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신을 가서 제주 4·3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 중 김봉현과 김민주는 제주 4·3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양민학살의 지역별 사례를 상세히 조사하였고 이는 후에 진상조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¹³⁾ 하지만 김봉현과 김민주의 연구는 무장대측의 입장에서만 서술하여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여겨졌으며 무엇보다 사건에 대한 과장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국내로 전파되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제주 4·3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권의 성격상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팽배하면서 반공의식이 점점 강화되었으며 이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제주 4·3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인식이 강함 제주 4·3에 대한 언급이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것으로 여겨져 사회를

11) 박찬식, 『4·3의 진실』, 제주 4·3평화재단, 2010, 97쪽.

12) 박찬식, 앞의 논문, 2017, 108~109쪽.

13) 박찬식, 앞의 책, 2010, 98쪽.

혼란하게 하는 반동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1978년 현기영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제주 4·3의 진상과 상처를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사건에 대해 알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작가는 불온한 내용을 썼다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겪었다.¹⁴⁾ 이것은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하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제주 4·3을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순이삼촌』은 제주 4·3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으로 당시 제주 4·3의 진실에 대한 언급을 한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제1차교육과정부터 제3차교육과정까지 3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역사교육에서 제주 4·3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식으로 교육하라고 정한 부분은 없었다. 다만 대체적으로 반공주의, 민족주의 등을 강화하는 기조의 교육방향이 정해졌다.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제주 4·3 서술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정한 부분은 없었지만 당연히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고 서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계속되는 제주 4·3에 대한 편향적인 사회 인식은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제주대학교에서 1986년 4월 3일 시도한 첫 4·3분향소 설치사건, 1987년 4월 3일 실시한 첫 4·3 위령제 등 제주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 4·3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었다. 위령제가 열리던 날 제주대학교에서는 제주 4·3을 민중항쟁으로 공식 규정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하지만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며 며칠 내에 모두 사라졌다. 경찰은 4월 15일 관련 학생들을 체포하며 학생회 조직을 위축시키고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시위 등을 차단하려고 하였지만 이는 더욱 강력한 항거를 불러왔다. 학생들은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다. 이후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사태는 마무리되었지만 4·3 대자보 사건은 대학가의 4·3 진상규명을 촉진시키는 발단이 되었다.¹⁵⁾

이 시기에 새롭게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제4차교육과정(1981~1988)을 1981년 공포된 것을 시작으로 시행하였다.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1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5, 전예원, 1998, 394쪽.

15) 윤철수, 「대학가의 4·3운동」,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평화재단, 2017, 119~125쪽.

진압하고, 1981년 제5공화국을 수립한 전두환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제4차교육과정에서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를 강조하여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국사교육은 이때에도 계속 독립교과로 남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제4차교육과정은 그전보다 많은 분량으로 근현대사를 서술하였다.¹⁶⁾ 제3차교육과정의 학습내용 과다를 지적하면서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라는 개선방안으로 볼 때 제3차교육과정의 근현대사 서술이 미흡하다고 파악한 것이다.¹⁷⁾ 이에 따라 제주 4·3 서술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 4·3은 편향적으로 서술되었는데 제주 4·3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제4차교육과정 교과서는 기존의 편향적인 관점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 정도로 서술변화가 이루어졌다.

<표 1은> 제2차교육과정에서 제4차교육과정까지의 제주 4·3 서술이다. 당시의 진상규명 및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않았기에 제주 4·3에 대한 서술은 국가가 주장하는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제2차~제4차교육과정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구분	교과서 내용
제2차교육과정	유우엔의 결의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공산 괴뢰 국가를 수립하였고, 전 한국의 공산화를 위하여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 폭동, 여수·순천 반란 등을 일으키고 각지에 게릴라전을 펴 수다한 양민을 학살하고, 막대한 재산을 잣더미로 만들었다. ¹⁸⁾
제3차교육과정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허점을 내다보면서, 김일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만들고, 북한 땅에 공산 독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란을 시도해 왔다. 그들은 소련에서 군원을 받아 급속히 군사력을 강화하여, 6·25 사변 직전까지에는 20여 만의 중무장한 군대를 편성하는

16)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교육과학사, 2011, 97~111쪽.

17) 강선주,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역사교육』97, 역사교육연구회, 2006, 107쪽.

	한편,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여수, 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¹⁹⁾
제4차교육과정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내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교란 작전을 폈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사주하여 제주도 폭동 사건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폭동 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제주도에 공산 무장 폭도가 봉기하여,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남한 교란 작전 중의 하나였다. 공산당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는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²⁰⁾

이 시기의 제주 4·3 서술의 주된 관점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무장폭동사건이다. 제주 4·3을 지배하던 전반적인 인식은 그 후 제6차교육과정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제2차~제3차교육과정에서는 단순히 북한이 남한을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차원의 제주도 폭동이라 소개되었다. 내용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그대로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제3차교육과정 교과서 내용에서는 사건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6·25 사변과 관련 있는 듯한 서술을 보이고 있다. 반공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 4·3을 공산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진상규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회적인 연구나 운동도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과서에서 언급 정도 되는 구조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의 명칭을 ‘제주도 폭동’이라고 지칭하면서 사건의 발생 시기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제4차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제주 4·3은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이 이루어지며 분량이 증가되었다. 다만 북한이 사주하여 일어난 폭동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제4차교육과정의 기조인 교육내용의 적정화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이루어졌으나 그 방향이 여전히 편향적이었다.

18) 문교부, 『국사』, 대한교과서, 1970, 187쪽.

19) 국사 편찬 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 『국사』, 대한교과서, 1980, 293쪽.

20) 국사 편찬 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83, 163쪽.

이는 당시 반공주의가 팽배하던 사회적 인식 속에서 제주 4·3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용어 역시 ‘제주도 폭동’ 정도로 칭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의도하는 관점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사건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정보 이외에는 어떠한 서술도 하지 않았다. 제주 4·3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없고 원인, 목적 등은 남한 교란 작전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국가적인 무장폭동으로 자연스럽게 반공정신을 고취시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주 4·3의 서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제2차교육과정에서 제4차교육과정까지 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된 데에는 제주 4·3을 공산주의 무장폭동으로 국가가 몰아가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크다. 역사교과서에 서술내용은 물론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충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사실들을 집필자들이 구성하여 넣는다. 그러나 제주 4·3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하였다. 자연스럽게 제주 4·3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언급하였지만 모두 다 무장폭동이라는 관점이었다.

제주 4·3 때 화를 피해 일본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국내로 전파되지는 못하였다. 제주 4·3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이 등장하였지만 그 저자는 국가에 의해서 많은 수난을 겪었다. 이처럼 제주 4·3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는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제주 4·3은 사건에 대한 설명 없이 언급만 되는 정도로 북한에서 일으킨 대남 공략의 일환으로 여겨지게 된다.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서술이 이루어졌지만 편향성을 지닌 관점이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제주 4·3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사건의 성격 역시 무장폭동으로 이해하였다. 이 시기에는 진상규명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산발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자연스럽게 사건에 대한 서술도 큰 변화가 없는 등 제주 4·3서술에 있어서 암흑기라 할 수 있다.

2) 4·3 공론화에 따른 교과서의 4·3 서술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1988년 4·3 40주년을 맞아 제주대 학생들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를 4·3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추모 현수막 및 4·3 방사탑을 세웠다. 학생들은 방사탑 앞에서 4·3진상규명 촉구집회를 열었는데 제주 4·3을 단일 주제로 한 정치 집회로는 처음 열린 것이었다.²¹⁾ 그동안 음지에서 머물러 있던 제주 4·3이 본격적으로 양지에서 적극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9년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제총협)가 출범하며 4·3 진상규명은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4·3 진상규명 운동도 변화가 일어나 위령과 추모 차원을 넘어 4·3에 대한 관점과 책임 주체 등 사건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후 제주 4·3 추모제가 열리고 4·3 진상규명 시위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는 등 4·3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은 점점 많은 곳으로 전파되었다.

대학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제주 4·3과 관련한 활동들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1989년 5월 10일에 발족된 제주 4·3연구소는 제주도민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적인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소의 주요 사업은 4·3 피해 증언조사, 자료수집, 연구 및 출판활동, 유적지 발굴 및 순례, 추모행사 참여 등이다. 4·3 연구소는 창립 직후부터 제주 4·3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전작업으로서 4·3증언 채록집인 『이제사 말함수다』1·2를 출판하였다. 실제 제주 4·3을 겪은 피해자 혹은 그 유족들의 증언 등을 통해 그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이다.

1990년 제42주년 4·3추모제가 제주교대와 성균관대 등에서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주최로 각각 열리는 동안, 제주 카톨릭회관에서 ‘민족사 속에서의 4·3’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주장했으며, 4·3추모제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 때 추모제는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반공유족들만이 목소리를 높이는 등

21) 윤철수, 앞의 논문, 2017, 126쪽.

문제가 많았다.²²⁾ 제주 4·3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반공이라는 사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던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 및 논의가 사회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주 4·3에 대한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 양한권의 연구와²³⁾ 박명림의 연구²⁴⁾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본격적인 제주 4·3 연구라 할 수 있다. 두 논문은 각기 방향을 배경과 전개과정이라는 다른 관점으로 연구하면서 제주 4·3연구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 4·3을 칭할 때 각각 ‘폭동’과 ‘항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제주 4·3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을 주제로 한 연구의 등장은 무엇보다 제주 4·3의 대한 논의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4·3 진상규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뒤에도 김광제의 연구²⁵⁾가 발표되었는데 점차 폭동으로서의 제주 4·3이 아니라 민중항쟁으로서의 제주 4·3으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4·3을 다룬 학술연구가 등장하면서 제주 4·3 연구의 기초가 다져지고 체계적인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범한 노태우 정권의 제5차교육과정(1988~1992)은 1988년 공포된 것을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군사정권시절의 연장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로 새롭게 출발한 노태우 정권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되던 한국사 연구자들의 국사교과서 비판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국사교과서의 획일성을 지적하면서 국정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집권세력의 영향 아래 있던 문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민주화 추세 속에서 등장한 진보적 성향의 한국 사학을 북한의 역사학과 동일시하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역사라 주장하였다. 당시 집권세력이 진보적 성향의 사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인식을 그

22) 양정심, 『제주 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222~224쪽.

23)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4)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5) 김광제, 「4·3제주 민중항쟁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대로 반영한 반응이다.²⁶⁾ 제5차교육과정에서 국사의 경우 절반을 근현대사에 할애하는 등 이전에 비해 근현대사 교육이 강화되었지만, 교육과정의 목표는 제4차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²⁷⁾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각 시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현재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제4차교육과정과 다른 점이다.²⁸⁾

제5차교육과정부터 역사적 사고력을 교육의 목표로 분명히 강조한 것과 더불어, 일부 한국사 연구자 등에 의해서 제기된 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비판을 수용하여 사회주의 계열의 서술이 시작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국사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점차 수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민주화를 통한 역사교육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제5차교육과정은 이후 사회 민주화 추세에 가속화, 진보사학의 활성화 역사교육 학계의 발전,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새로운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수용 논의 등과 같은 커다란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역사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²⁹⁾

제5차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1987년 6월에 국사교육심의회의에서 발표한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이다. 준거안은 교육과정과 더불어 시대별로 어떻게 교과서를 서술하여야 하는지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준거안을 살펴보면 고대사와 중·근세사와 비교하여 근·현대사부분은 큰 틀에서 방향 정도 제시하는 수준이다. 특히 광복 이후 현대사 부분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2>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1987년)³⁰⁾ <근·현대사>

광복 이후
3) 광복 이후 현대사의 서술 내용을 증명하되,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대해 기술한다.

26) 차미희, 앞의 책, 2011, 179~189쪽.

27) 이찬희·박진동, 『한·일역사과 교육과정 비교연구』, 경인문화사, 2010, 202~203쪽.

28)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12, 한국사회교육학회, 2005, 220~221쪽.

29) 차미희, 앞의 책, 2011, 254~256쪽.

30) 국사교육심의회,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1987.

- 4) 광복 이후 북한의 역사 변천에 대하여 민족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 5)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강조한다.
- 6) 광복 이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력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술한다.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을 살펴보면,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6) 광복 이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력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술한다”라는 부분과 그나마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제주 4·3을 바라본다면 제주 4·3은 공산주의의 폭동을 진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수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진압하는 행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준거안에서도 제주 4·3을 기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비롯하여 한국사 학계와 역사 교육 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후부터 서술되는 역사과 교과서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때를 시작으로 교육과정마다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준거안 또는 집필기준이라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 서술지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준거안의 등장은 교육과정으로만 이루어지던 역사교과서 서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등장이라 평가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제주 4·3과 관련된 서술지침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 시기부터 조금씩 제주 4·3 서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제주 4·3 연구의 등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을 다루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제주 4·3 서술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4·3추모제가 개최되어도 여전히 반공유족의 목소리가 더 강한 등 이념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제주 4·3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주 4·3 서술이 등장했다. 사건의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성격 및 전개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 등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제주 4·3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제주 4·3에 대해서 과거보다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다.

<표 3> 제5차교육과정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p>공산주의자들은 남한 내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교란 작전을 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그들은 제주도 4·3 사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등을 일으켰다.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그들은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군경의 진압 작전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³¹⁾</p>	<p style="text-align: center;">반공의거와 공산폭동</p>
---	---

제5차교육과정의 교과서 서술에서는 그동안 ‘제주도 폭동’으로 불리던 제주 4·3이 ‘제주도 4·3사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 교육과정들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 시기를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그전의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만 설명되던 사건이 단순히 남한을 혼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수립을 위해 벌어지는 5·10 총선거를 방해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지닌 사건으로 서술을 구체화 하였다. 자연스럽게 사건의 성격 역시 과거보다 더욱 명확해졌으며 이전의 감성적인 서술에서 이성적인 서술로 표현방식이 변화하였다. 진상규명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와중에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건의 명칭이 정식으로 정해지고 세부적인 서술이 이루어지는 등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표 3>을 통해 보면, <반공의거와 공산폭동>이라는 사진자료를 통해서 제주 4·3이 발생한 연도까지 전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차교육과정 후반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인한 관심과 제5차교육과정에서 수용한 이데올로기적 서술을 상세히 한다는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서술변화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주 4·3을 ‘제주도 4·3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

31) 국사 편찬 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90, 177~178쪽.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명칭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고, ‘제주도 폭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중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과거보다 완화된 제주 4·3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은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 후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4·3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단순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진상규명이 본격적인 공론화 및 법제화의 단계로 발전한 것을 보여준다. 운동의 주역은 제주사람들이 중심이었고 그 중심부에는 다양한 재야 예술인과 학생운동가, 학자들이 포함되어 4·3진상규명운동은 다양한 방향으로 번져나갔다.³²⁾ 이와 더불어 제주 4·3에 대한 시화전, 마당극 공연, 노래 등 단순한 집회가 아닌 다양한 관련 자료들이 제작되었으며 활성화되었다.

4·3 진상규명운동은 제주 4·3과 내용이 흡사한 대만 2·28사건에 대해 대만 정부가 명예회복 조치와 피해 보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1994년에는 여·야 국회의원 75명이 4·3특위 구성안을 발의하며 처음으로 4·3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정식 의안으로 발의되었다. 또한 1994년에 처음으로 4·3 합동위령제가 열렸는데 그동안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갈등을 빚어오며 각각 위령제가 집행되던 것이 제주도의회의 중재로 함께 개최되었다. 1995년에는 진상규명운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회에서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를 통해 제주 4·3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1996년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154명의 찬성으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제주 4·3이 사적인 영역의 논의에서 점차 공적인 영역의 논의로 진출한 것이다.³³⁾

진상규명이 공론화의 방향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제주 4·3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성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보도한 제주 4·3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김광우의 연구³⁴⁾, 제주 4·3을 항쟁으로 바라보면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라는 당시 제주도의 주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연구한 양정심의 연구³⁵⁾

32) 박찬식, 앞의 책, 2010, 100쪽.

33)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998, 403~409쪽.

34) 김광우, 「언론의 제주 4·3보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35)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 :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

등 제주 4·3에 대한 연구는 점차 다양화 되었다. 제주 4·3 연구의 확장은 제주 4·3의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진상규명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연구들이 활기를 띠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연구 성과 중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바로 제민일보 4·3취재반이 1994년 출판한 『4·3은 말한다』를 들 수 있다. 『4·3은 말한다』는 1990년 6월부터 제민일보에서 연재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제주 4·3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피해상황 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4·3은 말한다』는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거의 최초로 제주 4·3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서술하여 뒤에 나올 진상조사보고서를 비롯한 후대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시리즈로 출판하여 마지막 책인 5권이 1998년에 출판되었다.

여기서는 광복 전 제주도의 혼란한 사회적 배경부터 제주 4·3의 발발 배경, 진행과정, 결과, 성격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의 제주 4·3 연구가 무장대 혹은 토벌대 입장에서 서술되는 것과는 달리 객관적인 시각으로 두 집단을 바라보았다. 특히 제주 4·3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일어난 3·1절 발포사건에 대한 기사, 4·3 당시 초기 토벌대장인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당시의 참혹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연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기존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정부의 미숙한 도정 운영 및 과잉대응으로 보았다. 성격은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는 기존의 관점보다는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성격으로 보는 등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근거로 하여 기존 사회적 인식과는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단순히 군·경뿐만 아니라 미군정, 서북청년단 등 다양한 세력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건의 피해상황을 마을별로 상세히 서술하고 실제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³⁶⁾

처음으로 제주 4·3 연구가 나온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주 4·3

위논문, 1995.

36)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5권, 1998.

에 대한 연구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4·3은 말한다』와 같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세부적으로 연구하면서 제주 4·3의 성격을 규정하는 연구가 나타난 것은, 제주 4·3의 연구 수준이 과거보다 진전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권의 성격이 바뀌고 계속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움직임 속에 제주 4·3 인식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곧 과거 감추어져 있던 사건의 진실을 드러냈으며, 이념이 아닌 사실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연구수준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제주 4·3으로 발생한 주민희생이 연구 속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김영삼 정부가 개정한 제6차교육과정(1992~1997)은 1992년 공포된 것을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부터 독립교과목으로 편성되었던 국사과가 사회과 내로 다시 편입되었는데 이는 국사과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차교육과정은 한국사 인식 및 국사교과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립이 격렬한 때이기도 하다. 1994년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1차 시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여기서는 ‘제주도 4·3사건’을 ‘제주도 4·3항쟁’으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는 등 근·현대사 용어 사용에서 변화를 꾀하였다. 계속된 제주 4·3 진상규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시안은 여러 언론과 단체 등의 집중 공격을 받았으며 북한을 선전한다고 하는 등 이데올로기 공세가 계속되었다. 이를 만든 학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은 극히 미약하였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변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제주 4·3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표현으로 서술되었다. 이 같은 논쟁은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국사교과서가 여전히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국사교과서의 이데올로기 편향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국사교과서도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지만 아직도 국사교과서는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었다.³⁷⁾

37)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57~59쪽.

제6차교육과정시기에 발표된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은 그 전 시기의 준거안과 비교하여 현대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준거안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4·3사건을 기술하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그 의의가 크다.

<표 4>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³⁸⁾ <현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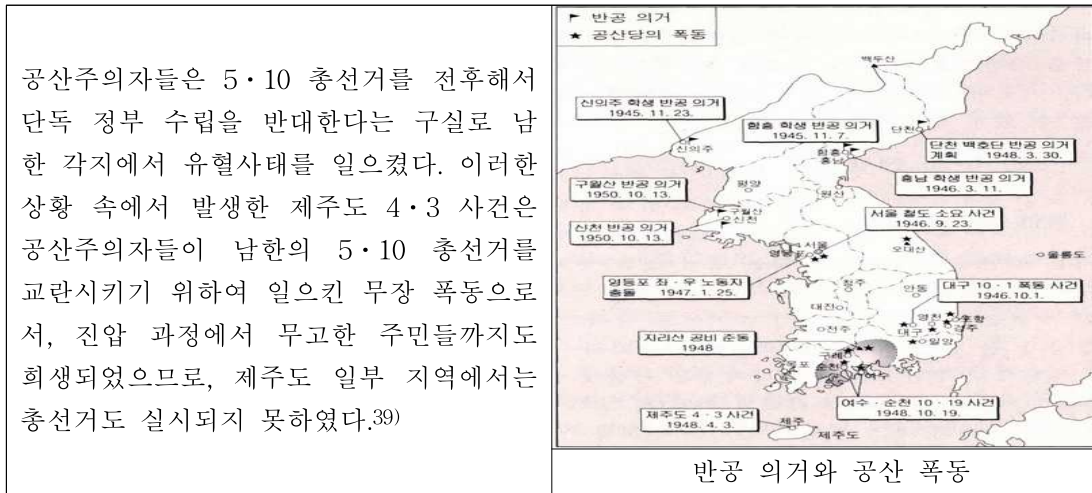
(3) 대한민국의 수립과 분단
<p>① 한국 문제가 유엔에 넘어가게 된 배경과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결정 과정을 서술하여 대한 민국이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 정부임을 이해하게 한다.</p> <p>② 남북 협상과 5·10총선거 과정을 서술한다.</p> <p>③ 대한 민국의 국가 기구와 헌법의 특징을 설명한다.</p> <p>④ 반민법 제정, 농지 개혁 등 건국 초기의 활동과 제주도 4·3사건 및 여·순 사건 등을 서술한다.</p>

과거의 준거안과 비교하여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여 서술하라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서술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다.

제주 4·3서술과 관련한 부분은 “④ 반민법 제정, 농지 개혁 등 건국 초기의 활동과 제주도 4·3사건 및 여·순 사건 등을 서술한다”라는 부분이다. 제6차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준거안에서 직접적으로 제주도 4·3사건과 여·순 사건을 서술하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어떤 식으로 서술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서술하라고만 되어있어서 사건의 성격이나 특징을 통한 서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 4·3이 직접적으로 준거안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비록 용어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준거안에 제주 4·3이 등장한 것은 계속 되어온 진상규명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제주 4·3은 그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서술이 등장한다.

38) 교육부,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1994.

<표 5> 제6차교육과정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제6차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제주 4·3은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서술내용 변화가 있었다. 바로 주민희생에 대한 언급이 교과서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제주 4·3이 종료된 직후부터 제기되던 문제였지만 오랜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언급이 금기시 되었다가 민주항쟁 이후로 진상규명운동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다. 무고한 주민희생에 대한 문제는 진상규명에서 가장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교과서에 실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제주 4·3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민간인 학살 및 국가 폭력 등에 대한 시초이기도 하다. 물론 단순히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일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 것은 『4·3은 말한다』와 같이 제주 4·3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서술하는 연구에서 주민희생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이루어진 것이 교과서에도 반영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제5차에서 제6차교육과정시기는 제주 4·3 서술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제주 4·3과 관련한 연구 성과 및 사회적 활동들로 제주 4·3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전면적인 인식 전환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교과서에 서술되는 제주 4·3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공산주의 무장폭동

39) 국사 편찬 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96, 196~197쪽.

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관점의 교과서 서술이 등장한다는 것은 제주 4·3 서술이 과거보다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는 민주항쟁으로 점차 사회가 변해갔고 정권이 바뀌어 제주 4·3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해지면서 진상규명이 계속되고 이와 함께 발생한 보다 객관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타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제주 4·3 연구의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

특히 김영삼 정부로 들어오면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교과서에 언급되었는데 이는 제주 4·3 서술에서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동안 제주 4·3으로 희생당한 희생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였으며 무장폭동에 가담한 빨갱이들로 여겨졌다. 그들의 죽음은 국가에 반역한 대가로 벌을 받은 것이었고 그 유족들도 빨갱이의 가족이라 불리며 많은 고난을 겪었다. 무고한 주민희생이라는 서술이 등장한 것은 희생자들 중에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변한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제주 4·3이 공산주의 무장폭동인 것은 맞지만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의 변화는 제주 4·3 진상규명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희생자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면서 조금씩 이루어낸 결과의 산물로 제주 4·3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진상규명운동과 4·3 서술의 변화

1997년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재야와 학계인사들이 연계한 전국적인 조직인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 위원회’(4·3범국민위)가 발족되어 다양한 학술문화 및 위령·기념행사가 펼쳐졌다. 무엇보다 수평적 정권교체로 4·3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4·3범국민위는 1998년을 4·3 명예회복의 해로 정하여 국회에 4·3특위를 설치하고 4·3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식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999년에는 4·3도민연대가 결성되

고 도내 24개 단체를 아우른 4·3연대회의를 구성하여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1999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같은 4·3 진상규명운동의 성과는 민간 영역에 비공식적 차원에 머물던 제주 4·3이 제주도의회가 주도하는 공식적 차원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화 직후까지도 제주 4·3 문제는 중앙의 정치적 이슈에서 주변화 되어 있었는데 이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주도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제주 4·3 해결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제주 4·3은 여전히 중앙정치무대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에 의해 지역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치의 이슈로 진화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⁴⁰⁾

제주 4·3 문제 해결의 전국적인 이슈화는 4·3 관련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하나의 뜻으로 뭉치게 하였다. 이는 곧 여론을 통한 압박으로 이어졌는데 이 같은 압력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1987년 김대중 후보를 시작으로 4·3 진상규명과 특별법에 관한 공약이 계속 이어졌으나 별다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결국 4·3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제주 4·3문제는 공식적인 제도적 기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활동들이 시작되었다.⁴¹⁾ 4·3 유족의 희생자 신고가 시작되어 14,028명 중 1,715명이 2002년 정부로부터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4·3 평화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2년 11월 20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편찬한 4·3진상조사보고서(안)가 확정되었다. 보고서 초안에는 제주 4·3의 발생부터 피해상황까지의 자세한 기록을 포함하여 제주 4·

40) 고경민, 「제주 4·3진상규명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86~87쪽.

41) 4·3중앙위원회, 4·3실무위원회, 4·3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4·3처리지원단, 4·3지원사업소 등이 구성 설치되었다.

3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제주 4·3관련 재단 조성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희생자 유골발굴, 생계 곤란자 지원 등 제주 4·3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되었다.⁴²⁾

4·3 특별법 제정과 그 규정에 따른 정부 활동의 공식화는 그동안 분화·대립의 구도를 보여온 4·3관련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주었으며 이는 곧 협력적인 연대활동으로 이어졌다. 여러 단체가 통합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거창양민학살, 10·19사건) 등의 단체와도 연대를 모색하는 등 특별법 제정은 연대와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4·3특별법 제정을 문제 삼는 등 제주 4·3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측에서 공세를 시작하였다. 이는 곧 4·3진상조사보고서(안)를 둘러싼 위원회 내의 의견 충돌로 이어져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 반대 측은 4·3진상조사보고서가 원인보다 과잉 진압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편을 갈라 서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확정되지 못하고 유예를 전제로 발표될 수밖에 없었다.⁴³⁾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 15일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2003년 10월 31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사과를 표명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그동안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었다는 제주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는 성격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 진상규명이 4·3 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끌어 내는 데는 진보정부의 재집권이 기획구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기획구조화가 4·3 진상규명운동을 제도화의 단계로 진입시킨 것이다.⁴⁴⁾ 이는 물론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역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인식 및 성격이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권의 성격이 바뀌면 지금 제주 4·3이 이루어낸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고도

42) 양정심, 『제주 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228~229쪽.

43) 양정심, 앞의 책, 2008, 230~231쪽.

44) 고경민, 앞의 논문, 2013, 90쪽.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제주 4·3을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하는 성과들이 나타났다. 먼저, 단순히 이념이나 단독정부수립 반대를 넘어서 미군정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의 연구가 등장하는데, 문순보의 연구⁴⁵⁾나 허호준의 연구⁴⁶⁾가 그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배경에서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끼쳤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제주 4·3에서 미군정의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 이 시기부터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제주 4·3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 4·3 당시 교육시설의 피해를 연구한 윤석찬의 연구⁴⁷⁾는 문헌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증언·채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증언자의 기억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피해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 4·3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이전에 사건 자체를 파악하는 연구형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제주 4·3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3은 말한다』의 경우에도 1997년에 시리즈 4권이, 1998년에 시리즈 5권이 출판되어 본격적으로 피해마을과 어떤 종류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상세히 서술하였다. 최근까지 제주 4·3 진상규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정리하는 등 제주 4·3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자료로 훌륭한 성과를 남기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는 누가 뭐라 해도 『4·3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로 약칭)가 확정된 것이다. 그동안 학자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연구나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의 조사활동 등은 이루어졌지만 파급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주 4·3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되었고 제주 4·3의 성격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제주 4·

45) 문순보, 「제주 민주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6)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7) 윤석찬,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 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 연구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물론 진상조사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2003년에 보고서가 확정되고 뒤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어지면서 제주 4·3은 55년만에 비로소 폭동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제주 4·3의 배경은 1947년 경찰의 3·1절 발포사건으로, 주체는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로, 진행시기는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로, 결과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것으로, 성격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난 국가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제주 4·3이 국가에 의한 잘못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어왔던 제주 4·3을 둘러싼 여러 연구들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등 그 성과는 매우 다양하고 파격적이다. 물론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연구의 완결로 보기 보다는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하며 추가로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4·3은 말한다』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에 관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작성한 최초의 공식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제주 4·3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성격규정의 단계가 심화되면서 사건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사건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결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제주 4·3 연구가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공식적으로 제주 4·3은 폭동이라는 관점이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제주 4·3에 대한 인식은 변화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느냐에 문제였다. 과거에도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교과서에 반영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제7차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제주 4·3은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는데 이는 기존에 획일적이던 국정교과서 시기에서 새로운 체제로 변화가 일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상규명이 활성화되고 제주 4·3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분위기로 바뀌는 와중에 새로운 제7차교육과정(1997~2006)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제1차에서 제6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

육과정의 개정이 일어났지만 기존의 서술체제 안에서 내용을 바꾸는 정도에 그쳤다면, 제7차교육과정은 교과서 서술체제를 바꾸는 것까지 이루어졌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오던 국사교육에서 학교급별 계열성을 보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국 근현대사과목의 등장이다. 기존의 국사교과서 내에서 함께 다루던 근현대사분야를 분리하여 독립과목으로 삼은 것은 역사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였다. 비록 선택교과라는 제한성이 있지만 한국사의 단계적 접근을 시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⁴⁸⁾

그러나 제7차교육과정의 공통필수과목인 국사의 전근대사 중심 교과구성은 기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강화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근현대사를 전혀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때 일본에서 근대사 역사왜곡을 한 후소샤 교과서가 간행되면서 제7차교육과정 근현대사가 선택과목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비난받았다. 결국 급조된 근현대사 단원이 국사교과서에 추가되었지만⁴⁹⁾ 간단한 사실정도만 언급하는 정도였으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근현대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 교과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사건 중심의 내용 편성과 더불어 본문 위주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자료와 탐구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기존 교과서와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 있는 역사교육에 재미를 주는 것과 동시에, 수업 내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효과를 주었다.

기존 국정체제로 유지해오던 역사교육과정에서 일어난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부분적인 검인정체제의 등장이다. 국사교과서는 기존에 국정체를 유지하였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인정체를 취하여 총 6종의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검인정체의 등장은 그동안 국가의 시선으로 획일적이고 편향적으로 구성되던 교과서가 다양한 관점으로 제작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였다. 그 전부터 한국사 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국정체의 문제점으로 국가가 역사서술과 해석을 독점하여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

48) 진영준,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사학과, 2016, 55~57쪽.

49) 임하영,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변천과 쟁점』,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68~70쪽.

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7차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전면적인 검인정제는 아니지만 근현대사 과목에서 검인정제를 취한 교과서가 등장한 것은 교육과정이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 설명에서 처음으로 제주 4·3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6차에 이어서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⁵⁰⁾에도 이와 관련한 서술들이 등장하였다.

<표 6> 제7차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 영역별 내용」 및 「한국 근·현대사 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⁵⁰⁾

「한국 근·현대사」 영역별 내용	「한국 근·현대사 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
(가) 대한 민국의 수립 (ㄷ) 6·25 전쟁 ①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을 통하여 좌우 대립과 사회 혼란이 매우 심하였음을 이해한다. ② 북한 정권의 성립 과정, 공산화 과정, 남침을 위한 군사력 증강 등을 파악한다. ③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의 참혹상을 알고, 평화 통일이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임을 인식한다.	IV. 현대사회의 발전 (1) 대한민국의 수립 ① 광복을 전후한 시기 국제정세와 미국·소련의 대한정책을 서술하고 미·소에 의한 한반도 분할의 경위를 설명한다. ② 미·소 군정 하에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가 통일민족국가 건설, 식민지 잔재 청산, 토지제도 개혁 등이었음을 설명한다. ③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과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국내 정치 세력의 반응과 좌우대립의 심화 등을 서술한다. ④ 미소공동위원회의의 활동, 좌우합작운동의 전개와 좌절 등 통일국가 수립운동의 주요 흐름을 서술한다.

50) 교육부, 「한국 근·현대사 영역별 내용」, 1997 ; 교육부,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 1997.

	<p>⑤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을 미국의 대한 정책 변화 및 국내 단정노선의 등장과 등과 관련하여 서술한다.</p> <p>⑥ 5·10총선거의 실시 과정과 아울러서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남북협상 등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설명한다.</p> <p>⑦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그 정통성을 서술하고, 반민법 개정, 농지개혁법 제정 등 이승만 정부의 주요 정책과 성격을 설명한다.</p> <p>⑧ 건국 초기의 국내외 정세와 제주도 4·3 사건 및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p>
--	---

제7차교육과정에서 제주 4·3 서술은 교육과정과 준거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단순히 사건을 서술하라는 표현으로 그쳤던 제6차교육과정과는 달리 사건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내용에서 제주 4·3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좌우 대립과 사회 혼란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준거안에서는 건국 초기의 국내외 정세와 함께 설명하라고 서술되었다. 역사교과서를 서술하는 기준은 교육과정과 준거안으로 역사교과서는 이에 맞추어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과 준거안에서 제주 4·3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교육과정상으로는 6·25 전쟁의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어 마치 6·25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거안에서는 순서상 정부수립과정에서 국내정세의 일환으로 파악하라는 것으로 보인다.⁵¹⁾ 두 기준으로 볼 때 서로 시대 및 성격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과정 및 준거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서술해야 할 필요성은 강조되었지만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하는지를 애매모호하게 제시한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

51) 한철호, 앞의 논문, 2011, 222쪽.

었다.

제7차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제주 4·3서술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확실히 변화하였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정부에서 제주 4·3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⁵²⁾ 그동안의 진상규명의 결과로 제주 4·3이 공식화·제도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 4·3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에서 검인 정제로 출판한 제7차교육과정 근현대사 교과서는 천재교육,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법문사,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총 6종으로 출판하였다.⁵³⁾ 제주 4·3의 가장 큰 연구 성과인 진상조사보고서는 안타깝게도 발표 시기가 교과서 출판 시기인 2004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여러 요인으로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획일적인 서술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교과서가 서술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제주 4·3 관련 연구 성과들이 비록 일부이지만 교과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도 제주 4·3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었지만 그 반영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다양한 집필진들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면서 제주 4·3 서술은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서술이 이루어졌다. 물론 여전히 기존의 시각으로 제주 4·3을 서술하는 교과서나, 아예 제주 4·3 자체에 대해서 거의 서술하지 않는 교과서도 등장하였다. 먼저 천재, 중앙, 법문사에서 출판한 교과서들을 살펴보자.

<표 7> 제7차교육과정 천재·중앙·법문사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천재교육 54)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쉼기로 4.3사건이 발생하여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	---

52) 김대중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선거 공약 이래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53) 이하 천재, 중앙, 법문사, 금성, 두산, 대한으로 약칭.

<p>중 앙 교 육 진 흥 연 구 소 55)</p>	<p>1948년 4월에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자 소요 사건을 일으켰다(제주도 4.3사건). 이 사건은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자로 구성된 유격대와 군·경찰·극우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 사이에서 많은 양민이 희생당하기도 하였다.</p>	<p>▲ 반공 의거와 공산당 소요 사건</p>
<p>법 문 사 56)</p>	<p>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의 좌익 세력들이 미군 철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도내의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였다(제주도 4.3사건). 미 군정청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였는데,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p>	<p>▲ 남북한의 정치적 혼란</p>

<표 7>의 3종의 교과서는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사회적으로 제주 4·3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이다. 교과서별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천재는 오히려 제6차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보다 서술 분량 및 정보진달에서 퇴보하였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거의 없이 지나치게 간단하게 서술하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공론화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주민희생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앙과 법문사는 제6차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 서술되지 않았던 관점 및 내용들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다. 사건의 배경인 3·1절 발포사건에 대

54) 김홍수 외 5인,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04, 275쪽.

55) 주진오 외 4인,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287쪽.

56) 김중수 외 3인,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4, 256쪽.

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사건의 진행과정도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역시 제주 4·3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 다만 중앙에서 토벌대 구성세력을 설명할 때 극우 청년 단체를 언급하거나 법문사에서 미군정청이 토벌 주체로 등장하는 점 등은 제주 4·3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성과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재, 중앙, 법문 3종의 교과서는 사건의 배경은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으며, 주도세력도 중앙과 법문에서는 좌익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였고, 천재는 도민이라는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⁵⁷⁾ 무엇보다 사건에 대한 최근의 성과와 관련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지나치게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3종의 교과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서술 분량도 매우 소략할 뿐 아니라 구성상으로도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는 등 제주 4·3 서술에서 매우 미흡하다⁵⁸⁾

이는 근현대사 과정을 분리하여 좀 더 상세히 근현대사를 학습하겠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조로서는 부적절한 것이다. 물론 조금이기는 하지만 제주 4·3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 및 관점들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설명할 때 미군정의 개입을 설명한 것은(법문사) 사건의 진압주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미군정이라는 관점으로 제주 4·3을 연구한 성과들이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기존의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고 표현하던 서술이 사라진 것은 사건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4·3 서술에서 새로운 표현의 등장은 4·3에 대한 연구 성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변해가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제주 4·3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과 비교하면 서술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두산, 금성, 대한에서 출판한 교과서들을 살펴보자. 이들 교과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교과서들과는 제주 4·3 서술에서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의 출판사들의 서술이 기존의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서술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면 뒤의 나올 교과서들은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교과서를 서술하고 있다.

57) 제주 4·3 당시 제주도민 천재가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58) 한철호, 앞의 논문, 2011, 232쪽.

<표 8> 제7차교육과정 두산·금성·대한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p>금 성 출 판 사 59)</p>	<p>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대 투쟁이 일어난 곳은 제주도였다. 1948년 4월 3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제주도 4·3 사건).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경찰 및 군인들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들 지역의 선거는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다. 미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되었다.</p>
<p>두 산 60)</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문·학·속·의·로</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도 4·3 사건을 다룬 현기영의 《순이 삼촌》</p> <p>나는 할아버지의 제삿날에 맞추어 8년 만에 고향제주도서촌마을에 내려간다. 거기에서 나는 순이 삼촌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순이 삼촌은 30년 전인 1948년 제주도 4·3 사건 당시 학살 현장에서 두 아이를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지만, 그때의 충격을 가슴에 안고 살다가 끝내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p> <p>‘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륙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나의 독백은 순이 삼촌뿐 아니라, 당시 가족이나 친지의 역할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수십년 간을 말 한 마디 못한 채 살아온 수많은 제주도민의 마음이기도 하다.</p> </div> <div style="width: 45%;"> <p>1948년 12월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30년 동안이나 묻혀 있던 제주도 4·3 사건을 처음으로 사회에 드러낸 문제작으로 손꼽힌다. 이 소설로 사람들은 비로소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 사건 중 하나인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1999년 12월 16일 ‘제주도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당시 희생된 제주도민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4·3 사건 당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한 진상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 style="font-size: small;">제주도 4·3 사건 때 최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제주 북촌리 마을</p>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internet site]</p> <p style="text-align: center;">▶ 끝나지 않은 역사 4·3</p> <p style="text-align: center;">http://www.cheju43.org</p> <p style="text-align: center;">▶ 제주 4·3 연구소</p> <p style="text-align: center;">http://www.jeju43.org</p> </div>
<p>두 산 60)</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도 4·3 사건</p> <p>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하여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3일에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들이 경찰 지서를 습격하는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미군 철수, 단독 선거 절대반대, 경찰과 테러 집단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제주도 4·3 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익 세력의 활동,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가 벌어졌을 때 군정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에 항의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군정 당국이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추가로 파견함으로써 제주도민과 군정 경찰 및 서북 청년단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미군정은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 경찰, 청년단을 증파하였다. 여기에 맞선 주민들은 한라산으로 들어가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고 대항하였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 총선거가</p>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토벌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도 많이 희생되었다.



제주도 4·3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

서북 청년단 1946년 11월에 서울에서 조직된 반공 단체로, 월남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반공 운동에 앞장섰다.



관련 자료 찾기

제주도 4·3 사건
<http://www.jeju43.org>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
 1949년 6월까지 계속된 진압 과정에서 약 2만~3만 명의 제주도 도민들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3-3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학습목표 :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을 통하여 좌·우 대립과 사회 혼란이 매우 심하였음을 이해한다.

대한
교과
서
61)

광복 후에 모든 국민은 통일 국가 수립을 바랐으나, 냉전 체제가 굳어지면서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과 군·경이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남한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었다.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 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며 항의하였다. 그런데 군정 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보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 명의 일반 주민들까지 투옥함으로써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이 사건은 1948년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p>탐구 활동</p>	<p>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p>
	<p>1 도움글 좌익 세력의 무장 봉기 5·10 총선거를 둘러싸고 좌·우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500명 가량의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저지를 통한 통일 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극우 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 지서와 서북 청년회 등의 우익 단체들을 습격하였다. 이로써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p> <p>한라산 정상 부근의 산림 지대를 수색하는 국군</p> <p>2 자료읽기 제주도에 공무원들의 부패가 극심하다. 제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시정 방침에 신축성이 없다는 것과 공무원들이 부패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제주도라는 곳은 워낙 살기 어려운 곳이고, 특히 공무원들은 제주도에 가는 것을 무슨 징배나 가는 양으로 생각함으로써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제주도로 안 가고 보니, 명예나 돈이나 바라는 친구들이 어찌 바른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패상은 작년에 내가 갔을 때 이미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품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 계열에서 바늘로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 할 것이다.</p> <p>-이인 검찰 총장(서울 신문, 1948년 6월 17일)-</p>
<p>열린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 1·3을 참고하여 좌익 세력이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일으킨 까닭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2는 제주도 4·3 사건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3. 다음 글을 읽고 제주도 4·3 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관련 자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홈페이지(www.jeu43.go.kr) 등에서 찾을 수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999년 12월, 국회는 여야 의원 216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4·3 특별법은 제주도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p> </div>
<p>위의 탐구 활동에서 보듯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를 주도한 것은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좌익 세력이었다. 그런데 국군과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면서 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1954년에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않고 있다. 이와 같이 5·10 총선거를 둘러싼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출범한 대한 민국 정부는, 반공 태세를 강화하면서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기 위해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p>	

<표 8>에 3종의 교과서는 제주 4·3에 대한 달라진 인식이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교과서별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금성은 4·3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서술하였다. 제주 4·3과 관련한 최근의 성과가 반영되었다고

59) 김한중 외 5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4, 262~263쪽.
60) 김광남 외 4인,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4, 273~274쪽.
61) 한철호 외 5인,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4, 256~257쪽.

할 수 있다. 본문의 서술 분량은 적지만 보충자료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주 4·3에 대한 서술을 구성하고 있다.⁶²⁾ 두산과 대한은 3·1절 발포사건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였다. 이는 제주 4·3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한 서술로 기존의 연구 성과로 인해 나타낸 사실 중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 4·3이 단순히 5·10 총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쌓인 갈등으로 일어난 복합적인 사건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은 기존 교과서와 달리 최초로 교과서 서술에서 탐구활동을 배치하였는데 학생들 스스로 제주 4·3에 대해서 학습하게 한 것은 좋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진상규명 및 제주 4·3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성과들이 쌓여갔지만 그 영향이 교과서에 미치는 것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제7차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검인정제를 통한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등장으로 제주 4·3 서술이 다양화되면서 제주 4·3은 서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3종의 교과서처럼 기존의 서술을 고수하거나 조금 내용이 추가되는 정도로 그치는 교과서도 있었지만 그간의 진상규명 및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교과서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한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사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의 배경 측면에서는 3·1절 발포사건이 두산과 대한에서 언급되어 최초로 사건의 배경에 대한 성과를 반영한 서술이 등장하였고, 금성은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두산에서 언급하지 않은 특별법을 언급하여 최근의 성과를 서술하였다. 금성과 두산이 서로 배경과 최근 성과에서 미흡한 서술을 보인 것과 달리 대한은 배경과 특별법에 대해서 모두 서술하였고 특히 탐구활동을 최초로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제주 4·3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교과서로 평가할 수 있다. 주도세력에 대해서도 기존의 좌익이라고만 서술하던 것에서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 좌익을 중심으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 등 좌익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기존 관점보다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진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본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충자료

62) 한철호, 앞의 논문, 2011, 231쪽.

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서술이 이루어지는 등 제주 4·3 서술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이처럼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서술 및 최근 성과 반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진상규명의 계속된 노력과 더불어 새롭게 진행되는 연구 성과를 수용하는 집필자들이 교과서를 서술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기존 국정에서 편향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교과서 서술이 부분적이거나 검인정제로 바뀌면서 다양화하였고 교육과정 및 준거안에서 제주 4·3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자 새로운 방법으로 교과서를 서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제주 4·3 서술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인 서술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변화였다. 특히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기존의 제주 4·3을 서술할 때 나타나던 폭동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제주 4·3의 연구 성과들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7차교육과정에서 제주 4·3이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 제7차교육과정 근현대사가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제주 4·3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검인정제로 인하여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제주 4·3 관련 지식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서술구조를 지니는 것도 문제점이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교과서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제주 4·3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이지만 교과서 내용으로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제주 4·3 서술은 그동안의 진상규명 및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여 발전된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사건에 대한 최근의 과정 및 정보들이 자세히 서술되었고 탐구활동 등을 통하여 사건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제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 4·3 교육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제주 4·3과 관련한 여러 연구 성과들이 검인정제와 결합하면서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은 제주 4·3 서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획기적인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7차교육과정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제7차교육과정 근현대사 교과서 제주 4·3 서술의 특징

출판사	특징
천재	서술이 매우 간략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음
중앙	토벌대 구성세력에 극우 청년 단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과거와 유사하게 서술함
법문사	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개입을 서술하였으나 그 밖의 서술은 과거와 동일함
금성	본문의 내용은 적지만 보충 자료를 통해 사건의 성격과 특별법의 의미를 제시하며 본문을 보완하고 있음
두산	본문에서 사건의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고 사건의 피해상황과 사진 등을 실어 사건의 이해를 돕고 있음
대한	사건의 서술 분량이 가장 많고 유일하게 탐구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구성함

제7차교육과정 근현대사 교과서는 같은 사실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내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교과서는 과거의 교과서와 달리 여러 보충자료를 사용하고 본문에서 서술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것은 근현대사 교과서가 등장하면서 제주 4·3을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검인정제도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는 교과서별로 내용의 편차가 있어 어느 교과서를 배우는가에 따라 제주 4·3교육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제주 4·3 연구 성과가 사건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지만, 집필자의 관점에 따라 교과서에 반영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검인정체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서술은 일부지만 과거보다 분명히 진전되었는데, 이는 관련 연구 성과가 교과서 서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질적 향상을 이루었음을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

Ⅲ. 4·3 공인 이후 교과서 서술의 경향

1. 진상규명을 둘러싼 갈등과 4·3 서술의 퇴보

제주 4·3 진상규명은 55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의 사과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제주 4·3으로 아픔을 겪었던 유족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자 보수 세력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그전에도 제주 4·3과 관련하여 많은 보수 세력들의 반발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우선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자마자 보수 우익세력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이진우, 이현희 등은 언론을 통해 특별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논설을 실었고, 보수인사 이철승은 4·3특별법은 4·3 폭동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고 폭동 주동자들을 명예회복 시키는 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보수세력의 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이철승 등 15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때는 특별법에 따른 의결기관인 4·3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이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보수단체들이 4·3특별법에 제동을 걸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헌법 소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해당 법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철승 등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제주 4·3 당시 관련자들과 연관이 있으며 4·3특별법이 제정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다.⁶³⁾ 뒤이어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3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63) 김종민, 『법정에 선 4·3』,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평화재단, 2017, 902~906쪽.

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법 자체만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보수세력의 공세는 한풀 꺾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등은 이 법에서의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향후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여지를 남겼다⁶⁴⁾

이처럼 과거부터 시작된 보수세력의 공세는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 사과 이후에 더욱 강해졌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가 벌어져 4·3 문제 해결에서 위기가 닦쳤지만 이에 대한 역풍으로 보수 정치인들이 대거 몰락하자 보수세력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보수세력의 계속되는 공세에 유족들과 도민들은 마침내 대거 폭발하여 이들을 비난하였다. 제주 출신 보수세력들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되었다.

보수 세력은 그 뒤에도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유족 중에서도 군·경의 진압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많으며 반격을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갈등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각하 결정을 내렸고, 4·3을 둘러싼 보수 세력의 공세는 무위에 그치게 되었다.⁶⁵⁾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2008년은 4·3 60주기가 되는 해로 그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4·3 정책에 대해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4·3위원회의 폐지 방침과 보수우파의 4·3 무장폭동론 제기 등 제주 4·3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2009년 11월에는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았으나 예산 지원이 없어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등⁶⁶⁾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64) 김종민, 앞의 논문, 911~912쪽.

65) 김종민, 앞의 논문, 925~933쪽.

66) 김은희,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4·3과 역사』11, 제주 4·3 연구소, 2011, 154~155쪽.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제주 4·3이 정치이슈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지역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당을 가리지 않고 제주 4·3을 정치공약으로 내세워 제주도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였다.⁶⁷⁾ 이처럼 제주 4·3이 정치이슈화 되어가는 상황은 과거보다 발전된 제주 4·3의 위상변화를 알게 해주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주 4·3의 사회적 인식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으로 혼란한 배경에서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제주 4·3 연구는 이전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제주 4·3문제를 여성의 삶과 연관 지어 연구한 이정숙의 연구⁶⁸⁾와 제주도가 도제 실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것으로 제주 4·3의 배경을 연구한 현석이의 연구,⁶⁹⁾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통해 제주 4·3 당시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을 연구한 장윤식의 연구⁷⁰⁾ 등 제주 4·3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넘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보다 세부적이고 새로운 틀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6년에는 양정심이 최초로 제주 4·3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⁷¹⁾ 양정심은 이 연구에서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제주 4·3 이후 제주도에 끼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주 4·3이 단순한 피해자 위주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에 대해 경계를 가졌다. 그는 제주 4·3이 한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민주항쟁이라고 하며 이 같은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민간인 희생을 강조한 것과 달리 새로운 관점으로 제주 4·3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제주 4·3의 성격이 민간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분위 기상 진상조사보고서의 영향력을 뛰어넘기는 어려웠으며 교과서에 반영되지도 못하였다. 그 후에도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 4·3사건을 설명한 김평선의 연구⁷²⁾나 제주 4·3사건 초기 경비대와

67) 고경민,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건과 과제」,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244~246쪽.

68) 이정숙,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69) 현석이, 「도제 실시를 통해 본 제주 4·3의 정치 사회적 배경 : 1945년 8월 15일~1947년 2월 28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70) 장윤식, 「제주 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71) 양정심, 「제주 4·3투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2) 김평선,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 연구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무장대의 협상에 관한 연구를 했던 김용철의 연구⁷³⁾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의 제주 4·3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세부적으로 제주 4·3을 바라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제주 4·3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 민간인 학살에 관한 연구도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함옥금의 연구⁷⁴⁾는 당시 냉전체제 당시 미국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중심으로 바라보았으며, 허영선의 연구⁷⁵⁾는 민간인 학살 중에서도 아동학살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학살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했었는지를 밝혔다.

새로운 관점으로 제주 4·3을 바라본 현혜경의 연구⁷⁶⁾는 제주 4·3과 관련한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및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제주 4·3의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4·3기념의례의 형성과 형식은 두 가지 전략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섬이라는 고립성이 갖는 문화적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다른 지역의 문화운동이나 과거사 청산 모델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념사업으로서 4·3기념의례와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의 제주 4·3이 가지는 의미를 기념의례와 연관 지어 설명한 것이다.

제주 4·3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계속되는 갈등이 이어졌지만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면서 관련 내용이 더욱 풍성해져 갔다. 제주 4·3에 대한 성격이 진상보고서로 확실하게 규정되면서 제주 4·3을 보다 세부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주 4·3 연구는 사건자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집단·희생자·의례 등 연구대상을 넓혀갔다. 특히 이 시기에 처음으로 제주 4·3을 연구한 박사학위논문들이 등장했는데, 이는 제주 4·3과 관련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연구의 수준이 심화된 단계로 발전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문, 2009.

73) 김용철, 「제주 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4) 함옥금, 「'제주 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5) 허영선, 「제주4·3시기 아동 학살 연구 :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7.

76)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교과서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우선 연구가 과거보다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과서에 반영하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롭게 나온 연구들이 진상조사보고서의 영향력을 넘을 만큼의 과급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사건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는 시기였지만 그 과급력은 과거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연구는 바로 2003년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온 시기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보고서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기에 제7차교육과정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물론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도 있었지만 그것은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제주 4·3 관련성과 특히 『4·3은 말한다』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통해 서술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교육과정인 2007·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교과서에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다. 다만 뒤에서 언급할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에서도 진상조사보고서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사회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새롭게 개정된 2007 개정 교육과정(개정7차교육과정)은 제7차교육과정과 큰 골격은 거의 유사했지만 선택과정에서 일반 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이 없어졌다. 역사교육 강화 방침에 의하여 역사가 중·고등학교에서 독립과목을 이루었고 고등학교에서 역사시수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⁷⁷⁾ 이에 맞추어 검인정체로 변한 국사(한국사)교과서는 총 6종이 되었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년 뒤에 새로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됨으로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도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수시개정 체제로 사회변화와 새로운 이론에 따라 수시로 교육과정을 고치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⁷⁸⁾ 무엇보다 이러한 수시개정이 적법한 법률이나 규

77) 이찬희·박진동, 앞의 책 2010, 29~30쪽.

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교육과정
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정부의 모습은 뒤에서 설명되는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표 10>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역사교과서
집필기준⁷⁹⁾**

「역사」 내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p>(7)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가) 단원의 개관</p> <p>8·15광복부터 6.25 전쟁과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까지를 다룬다. 8·15광복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 승리의 결과라는 측면과 우리 민족의 줄기찬 독립 운동의 결과라는 측면을 함께 파악한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분단이 현실화되어 갔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전면 공격에 따라 일어난 6·25전쟁과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까지를 다룬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은 좌·우의 갈등을 폭발시켰고, 좌우 합작의 움직임과 남북 협상 노력이 있었으나 남북은 각각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면서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6·25전쟁으로 민족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 형성된 남북의 대결 구도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p> <p>(나) 교수·학습 내용</p>	<p>VIII. 대한 민국의 수립과 발전</p> <p>1. 대한 민국의 수립</p> <p>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는 미국과 소련의 대두,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 냉전 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복 직후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국과 소련에 대한 서술에서, 특정 국가,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8·15 광복이 연합군의 승리와,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전개한 독립 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을 이해하고, 많은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지지하게 된 이유,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 이유, 8·15 광복 이후 전개된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p>

78) 전영준, 앞의 책, 2016, 63쪽.

79)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④ 사회(역사)」, 2007 ; 교육과학기술부,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2009.

<p>② 8·15광복 직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한다. 8·15광복과 국토의 분단 등을 국제 정세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며,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른 미·소 공동 위원회의 전개와 결렬 이유를 파악한다.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우세력의 충돌이 격화되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 등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p> <p>③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및 그 의의를 파악하고, 농지 개혁과 친일파 청산이 추진되었음을 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남북한은 각각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진행하였다. 남한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북한도 정권을 수립하였다. 헌법을 제정하고 활동을 전개한 제헌 국회는 토지 문제 해결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때 추진한 농지 개혁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한다.</p> <p>④ 6·25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그 참상을 알고, 전후 남북한의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안다. 6·25전쟁은 북한 정권의 전면적인 남침에 의해 발발하였음을 이해한다. 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휴전 협상으로 오늘날 군사 분계선이 형성되었음을 이해한다.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인적 피해로 인해 남북한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까지 안게 되었다. 전쟁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끼친 여파를 다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p>	<p>을 설명한다. 또한 UN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UN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설명 시 대한민국의 건국과 시련,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대한민국은 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 6·25 전쟁</p> <p>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UN군이 참전하고 중국군이 개입하는 등 국제적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된 과정을 설명한다. 전쟁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경제가 파탄되는 등 우리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한다. 또한 휴전 협정의 추진 과정과 그 내용, 6·25 전쟁의 국제적인 맥락도 서술할 필요가 있다.</p>
---	--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역사교육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정의 대강화에 따라 단원을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그에 따라 제주 4·3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지침 내용이 사라졌다. 이는 집필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검인정제 하에서 교과서 서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주 4·3에 대한 서술기준이 그전과 비교하여 더욱 애매모호하였기 때문에 집필자에 관점에 따라서 서술방향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상존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사라지고 국사 교과서에 통합됨에 따라서 제주 4·3은 서술이 줄어드는 필연적인 사태를 맞았다. 교육과정에서 제주 4·3과 관련 있는 부분은 ‘남한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정도였다. 집필기준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설명 시 대한민국의 건국과 시련,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정도가 있다. 직접적인 언급이 사라지고 명확한 서술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주 4·3에 대한 서술은 전적으로 집필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서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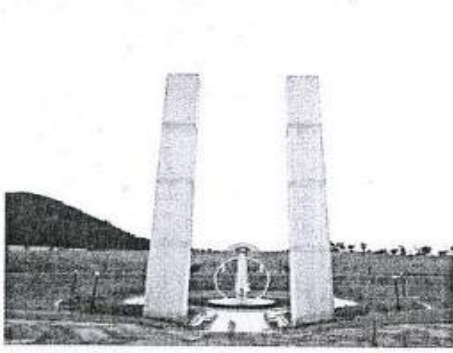
진상규명 및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제주 4·3에 대한 성과가 쌓여가는 것과는 달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서의 제주 4·3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제주 4·3 서술에 대한 우려를 초래했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교과서가 나오자 사실이 되었는데 과거 근현대사 교과서와 비교하여 내용상의 퇴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제주 4·3 서술은 이전 제7차교육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분량이 그전과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었으며 사건에 대한 설명 간략화가 일어났다. 출판사는 범문사,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지학사, 미래엔컬처, 천재교육 총 6종이다.⁸⁰⁾ 이 시기부터 전면적인 검인정체제가 시행되어 다양한 관점의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먼저 <표 11>에서 서술이 미흡한 교과서 3종을 제시하려 한다.

80) 이하 범문사, 비상, 삼화, 지학사, 미래엔, 천재로 약칭.

<표 11>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법문사·비상·삼화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p>법문사 81)</p>	<p>제주도에서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제주 4.3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p>	<p>▲ 남북한의 정치적 혼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남부한에서는 좌우 세력의 소요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 혼란이 극심하였다.</p>
<p>비상교육 82)</p>	<p>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이 단독정부수립 반대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서를 습격하였다(제주 4.3사건).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여 한라산에 들어가 경찰 및 군인들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 3곳 중 2곳에서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도민들까지 함께 희생되기도 하였다.</p> <p>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좌·우익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회가 여전히 불안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좌익 세력이 개입한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이후 산으로 들어간 일부 반란군의 게릴라 활동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좌익 세력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남한내의 사회 혼란을 조장하였다.</p>	<p>백조 일손 묘역</p> <p>남제주군 대정읍에는 하나의 위령비 아래 100여 구의 묘지가 함께 모여 있는 묘역이 있다.</p> <p>1950년 8월 20일, 제주 4·3 사건의 막바지이자 6·25 전쟁 초기에 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 첫날 오름에서는 '죽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미리 잡아 가두는 경찰의 예비 검속 과정에서 252명이 대량 학살되었다. 6년 후에야 이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지만 뼈들이 뒤엉켜 있어 누구의 시신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당시 유가족들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유해들을 안장한 후 '백조일손지(百祖一孫之地)'라고 이름을 지었다. '백조일손'이란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 누구의 시신인지도 모르는 채 같이 묻혀 무덤도 길고, 제사도 같이 치르니 그 자손은 하나다'라는 의미이다.</p> <p>▲ 백조 일손 묘지</p>

삼 화 출 판 사 83)	<p>총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에서는 좌익들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제주4.3사건) 경찰의 발포를 시작으로, 경찰·우익 등의 탄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있었으며, 단독 선거 반대를 주장하며 좌익 무장대가 봉기하였다.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하였다.</p>	 <p>4·3 기념탑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3 사건의 희생자는 2만5천 명에서 3만 명에 이른다(당시 제주도민은 약 28만 명).</p>
------------------------------	---	--

3종의 교과서는 진상조사보고서가 등장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성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교과서이다. 법문사는 제주 4·3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민희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비상은 진행과정과 결과 등을 제법 상세하게 서술하였지만 제주 4·3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왜곡된 서술을 보이고 있다. 삼화는 3종의 교과서 중 유일하게 전체 제주도 인구 대비 희생자 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사건의 참혹함을 알려주고 있지만 역시 제주 4·3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3종의 교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 4·3 서술이 많이 미흡한 교과서들이다. 이는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한국사 교과서체제로 바뀌면서 서술 분량이 감소했던 것도 있겠지만 교육과정 대강화와 집필기준에서의 제주 4·3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필자들이 제주 4·3에 대한 연구 성과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전에 연구되었던 제주 4·3 관련 성과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후로 제주 4·3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지만 3종의

81) 최준채 외 4인, 『한국사』, 법문사, 2011, 315쪽.
 82) 도면희 외 6인, 『한국사』, 비상교육, 2011, 316쪽, 324쪽.
 83) 이인석 외 5인,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308쪽.

교과서 모두 명확한 사건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3종의 교과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주 4·3의 발발 배경인 3·1절 발포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제주 4·3이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삼화 정도가 경찰의 발포라는 서술로 발발 배경을 조금이나마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없어 제주 4·3이 일어나고 경찰의 발포가 있었다는 식으로 학생들이 오해할 여지를 주고 있다. 주도세력에 대해서도 좌익,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법문사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마치 제주도민 전체가 제주 4·3에 가담한 것과 같은 오해를 줄 수 있다. 서술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서술하여 학생들이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3종의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제주 4·3에 대해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한 서술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백조 일손 묘역이라는 유적을 제시한 비상과 제주 4·3의 희생자 수를 제시한 삼화는 제주 4·3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 4·3의 성격을 설명할 때 이제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언급이 비상 교과서 서술에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으로 벌어지는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진상조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제주 4·3을 규정하던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는 관점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서술이 사회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주 4·3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도 제주 4·3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명칭인 제주 4·3 사건이라고 교과서에 서술되는 것은 조금이나마 진전된 사실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과서 서술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연구 성과가 진전된 것과 비교하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의 <표 12>에서 제시할 3종의 교과서는 앞에서 제시한 교과서들과 비교하여 제주 4·3과 관련한 최근의 성과들을 비교적 많이 반영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표 12>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미래엔·천재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p>지 학 사 84)</p>	<p>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과 같은 무력 항쟁이 있었으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p>	<p>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p> <p>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주민의 저항, 남조선 노동당 무장대의 경찰지서 습격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였다. 제주 4·3 사건은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비극적 사건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성과 민원이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부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1. 12. 공포)에 따</p> <p>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2000. 8. 28.)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또 4·3 평화 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부대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는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순천 일대에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은 곧 질서를 회복했지만, 반란군의 일부는 지리산 등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국군이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p>
<p>미 래 엔 결 쳐 85)</p>	<p>5.10 총선거를 전후하여 총선거를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 선거라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무장봉기하여 군경과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은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었다.</p> <p>제주 4.3사건 단독정부 수립을 거부하다</p> <p>1947년 제주도의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시위와 파업으로 항의했고, 미군정은 주도자들을 검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반 주민들도 투옥되자 주민들의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에 이르러 5.10총선거를 둘러싼 찬반 세력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좌익 세력은 4월 3일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국가 수립을 명분으로 경찰과 극우 세력의 탄압에 무장봉기하여 저항하였다. 좌익 무장대는 각지의 경찰지서와 서북 청년회 등의 우익 단체를 습격했고, 미군정은 군경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지역에서는 1년 뒤에야 선거가 실시되었다.</p>	
	<p>알아봅시다</p> <p>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0년 1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희생자를 2만 5천~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p>	

천 재 교 육 86)	<p>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 선거 반대와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미군정은 즉시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파견하여 토벌에 나섰다. 이후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 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제주도에서는 3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p> <p>1949년에는 좌익 세력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하에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활동을 견제하는 데 활용되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국민 보도 연맹을 조직하여 정치 선전에 활용하였다.</p>	
	<p>국민 보도 연맹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자유 민주주의로 인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만든 단체. 6·25 전쟁이 일어나자 단체 소속자들에 대한 예비 검속이 진행되었고, 곧이어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다.</p>	<p>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p> <p>6·25 전쟁을 거쳐 남북 분단이 굳어지면서 이 사건은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 이후 민주화의 진전으로 1990년대 이후 진상 규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침내 2000년 1월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접수 신고 및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실시되었다. 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1절 경찰 발포 사건으로 시작되어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일산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공식 규정하였다. 2003년 정부는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 모습(2009)</p>

<표 12>의 3종의 교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 4·3과 관련한 최근의 성과들이 반영되기 시작한 교과서이다. 일단 3종의 교과서 모두 제주 4·3의 발발 원인인 3·1절 발포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주민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4·3 특별법 등 제주 4·3과 관련한 최근 성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앞의 3종의 교과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나타났던 최근 성과를 반영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천재 교과서는 2003년에 정부가 공식 사과하였다는 표현을 서술하였는데 제주 4·3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한 중요한 사실을 서술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체적으로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 성과를 어느 정도 반영한 서술이 이루어졌으며 사건의 의미도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특히 앞의 3종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보충자

84) 정재정 외 4인, 『한국사』, 지학사, 2011, 268쪽.
 85) 한철호 외 5인, 『한국사』, 미래엔컬쳐, 2011, 336쪽.
 86) 주진호 외 7인, 『한국사』, 천재교육, 2011, 317쪽.

료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천재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제주 4·3의 최근 성과가 4·3특별법에서 멈춰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가 나온 시기는 2011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후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다.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 이후의 성과는 커녕 진상조사보고서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천재교육 단 하나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교과서 서술이 최근 성과가 반영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에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교과서체제가 바뀌고 제주 4·3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지침이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후 보수세력은 다양한 종류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다행히도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같은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으며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제주 4·3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여 제주 4·3을 대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이 제주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부가 바뀌자 보수세력이 다시 무더기 소송을 하는 것 등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서 제주 4·3의 대한 보수 세력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재판부의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같은 공간·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로 청구된 소송임에도 재판부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권의 변화로 제주 4·3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제주 4·3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화하면서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기상 진상조사보고서가 반영되기 어려웠던 제7차교육과정 교과서보다 오히려 제주 4·3에 대한 서술이 정체되거나 퇴보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천재 교과서처럼 최근 성과까지 충분히 반영된 교과서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제주 4·3 서술의 진전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것은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역사교과서가 사회적 배경의 영향으로 충분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주 4·3 서술은 대체적으로 퇴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사가 6종의 검인정제로 변화하면서 사건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천재 교과서 하나이기는 하지만 제주 4·3의 구체적인 배경과 최근에 다루어지고 있는 제주 4·3에 대한 성과 등을 반영한 교과서가 등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해 나아졌으며 진상조사보고서 및 정부의 사과가 이루어지며 공식적으로 사건을 언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과서에 따라서 내용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사건에 대한 연구와 성과 등이 교과서에 서술되었다.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라기에는 그 내용이 많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진상조사보고서와 국가의 사과 등 제주 4·3 관련 연구 성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실이 교과서에 처음 서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이처럼 최근의 성과가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대체적으로 제주 4·3에 대한 서술이 제7차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퇴보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양면성은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4·3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제주 4·3 서술의 특징

구분	특징
법문사	주민희생도 언급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간략하게 서술함
비상	백조 일손 묘역을 설명하는 등 사건과 관련한 유적지를 설명하였으나 역시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음. 무엇보다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왜곡된 표현을 사용함
삼화	구체적인 희생자수를 설명하는 등 사건에 대한 최근 성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으나 역시 사건에 대한 서술이 간략함

지학사	본문 내용은 적으나 보충자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이해를 돕고 있음
미래엔	본문에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서술을 하고 보충자료로 최근 성과를 설명하여 내용의 보완을 이루고 있음
천재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진상조사보고서의 가장 큰 성과인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고 있음

6종의 교과서는 일부 교과서에 이전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북한의 사주라는 왜곡된 표현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근현대사 교과서와 비교하여 보충자료 및 서술이 줄어들어 등 전체적으로 교과서서술이 퇴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 4·3의 연구 성과는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세분화되고 사건을 연구하는 수준이 심화된 단계까지 발전했지만, 교과서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교과서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진상조사보고서 이전의 연구 성과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등 서술의 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7차교육과정과 달리 이 시기에는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하였고, 정권이 바뀌면서 제주 4·3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등 사회적인 배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제주 4·3 서술이 퇴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일하게 천재 교과서에서 진상조사보고서의 성과인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교과서에서 서술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서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 진상규명의 결실과 4·3 서술의 다양화

4·3 특별법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후 4·3 진상규명은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결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4·3특별법을 살펴보면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그 중에서도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가

우선이였다. 하지만 보수세력의 계속되는 헌법소원으로 희생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보수정권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보수세력의 계속되는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희생자 및 유족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었다. 이들은 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조금이나마 4·3평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전면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정권의 성향이 과거와는 달라졌지만 4·3 특별법 등이 전면적으로 무효화 된 것은 아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였다. 제주 4·3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제주 4·3 진상규명이 과거보다 진보한 새로운 결실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밖에도 4·3 특별법에서 제기되던 주장에는 희생자 유해발굴이 있었다. 제주 4·3 당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지만 그 유해를 찾을 수 없어 많은 유족들이 고통을 겪었다. 진상규명이 공식화되면서 유해발굴 요구는 더욱 거세졌으며 2007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해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사업시행은 활기를 띠었고 안정적 추진의 토대가 되었다.⁸⁷⁾ 유해발굴은 제주도 각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많은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유해발굴이 생각보다 미미한 성과에 그쳤다는 4·3 도민연대에 비판이 나왔다.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유해발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는 등 유해발굴은 점차 활성화 되어갔다.

유해발굴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제주 4·3의 진상을 알리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벌어진 예비검속자의 학살 장소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당시 모슬포 지역에 구금되었던 사람은 모두 셋알오름에서 집단 학살되고, 또 서귀포 지역의 수용자는 대부분 수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발굴 유물과 유전자 감식 결과 모슬포·서귀포 지역 예비검속 수감자 중 일부는 정뜨르 비행장으로 이송한 후 학살당해 암매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제주 4·3과 한국전쟁 직후에 있었던 제주 지역의 예비검속 역사가 수정되었다.⁸⁸⁾ 유해발굴을 진행하면서

87) 장윤식, 「4·3유해의 발굴」,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평화재단, 2017, 749쪽.

88) 장윤식, 위의 연구, 2017, 761~762쪽.

단순히 희생자 유해발굴을 하여 유족 및 영혼을 위로한다는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역사를 수정한다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상규명의 결실이 희생자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있다면, 공간에 초점을 맞춘 진상규명의 결실도 등장하였다. 우선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주장한 4·3유적 복원 사업을 들 수 있다. 4·3 유적은 제주도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4·3연구소는 4·3 유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태 파악과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유적복원 사업은 정부 예산이 수립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추어졌던 4·3 유적들이 복원되어 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는 추가 예산지원이 사라져 복원이 진행되지 못하는 유적이 생기는 등 유적지 복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예산이 수립되기 전부터 유적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4·3연구소는 2013년 기준에 조사되지 않은 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제주도 일부 지역만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등 유적복원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⁸⁹⁾ 4·3 유적은 제주 4·3과 관련하여 기념성·역사성·지역성이 뛰어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유적복원과 관련한 추가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에 복원한 유적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유적이 기존에 있던 제주 4·3과 관련한 공간이라면 제주 4·3과 관련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제주 4·3 평화공원이다. 평화공원은 제주 4·3의 정신을 승화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평화를 가치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곳이자, 제주 4·3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비록 기념관의 문제나 아카이브 구축의 문제, 추가 도입 시설의 필요성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는 하지만⁹⁰⁾ 4·3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진상규

89) 김창후, 「4·3 유적의 복원」,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평화재단, 2017, 763~764쪽.

90) 박경훈,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평화재단, 2017, 856~857쪽.

명이 이루어낸 제주 4·3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실질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 4·3은 진상규명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며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다른 방향으로도 나타나는데 바로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 4·3은 기존의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보수세력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가폭력이라는 관점을 가지는 유족 간의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제주 4·3 진상규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제주경우회는 앞에서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확정되었을 때 심히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후 10년 만에 경우회가 입장을 바꿔 화해의 길에 들어섰다.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선언이 있기까지는 그들 나름대로의 공식·비공식 노력들이 있었다. 우선 2013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 4·3 화해와 상생의 길은 없는가?’라는 4·3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우익 인사의 발언으로 유족회가 항의하는 등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그런데 행사 마무리 이후 유족회장과 재향경우회장의 대화를 시작으로 경우회와 유족회 간의 화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관계를 이어갔으며 합동 추모행사를 개최하는 등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⁹¹⁾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4·3 진상규명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제주 4·3 진상규명을 위한 다른 노력으로는 마을단위별 4·3 희생자와 호국영령, 순국선열 등을 함께 추모하는 합동추모공간의 마련이다. 기존에는 서로가 반대의 입장이었고 적대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함께 추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합동추모공간은 여러 마을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제주 4·3 진상규명의 화해와 상생의 모습을 알려주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91) 장윤식, 「4·3의 해원과 화해」,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평화재단, 2017, 1045~1050쪽.

4·3 진상규명은 이처럼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제도적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3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희생자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그동안 우익세력과 갈등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제주 4·3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면서 4·3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지 11년만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각계에서는 환영이 나왔으며 이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잇달아 나타났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 중에 마지막 과제였던 4·3추념일 지정은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이 이어졌으며 특히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모습을 보여준 유족회와 경우회의 모습 등이 밑거름이 되었다. 여야 정치권의 법안처리 역시 큰 힘이 되었는데 보수정권이라 일컫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큰 의의가 있다. 그 전 이명박 정권 때 제주 4·3이 많은 난관을 겪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더욱 뜻깊은 일이다. 4·3추념일 지정은 4·3 정부가 4·3희생자를 역사의 희생자로 인정한 것으로 과거 갈등의 역사가 미래를 향한 화해와 상생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으로 진상규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⁹²⁾

이렇게 진상규명이 결실을 맺어가면서 제주 4·3에 관한 연구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주 4·3의 민간인 학살을 사건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가 등장하였다. 허호준의 연구⁹³⁾는 제주 4·3과 공간적 차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와 논리 속에서 민간인 학살을 야기한 그리스 내전과 비교를 하였다. 그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제주 4·3이 단순히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국지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당시의 세계적인 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제주 4·3의 사건의 의미를 세계적인 의미의 사건으로 확대한 것이다.

92) 장윤식, 「추념일 지정과 추념식 봉행」,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평화재단, 2017, 1076쪽.

93) 허호준,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다음으로 박영기의 연구⁹⁴⁾는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제주 4·3을 수업하면 제주 4·3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운섭의 연구⁹⁵⁾는 제주 4·3 평화교육을 활용하면 제주지역개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제주 4·3을 현재의 제주사회와 결합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과거 제주 4·3이 어떠한 사건이었는가를 넘어서 현재의 제주 4·3이 가지는 의미와 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주 4·3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 4·3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사건자체에 그 범위를 한정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세계사적인 의의나 현재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구상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계속해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확장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주 4·3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의 등장은 평화와 상생·화해와 공존의 방향으로 제주 4·3의 의미를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이러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4·3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상조사보고서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교과서가 출판된 2014년 즉 11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서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화해와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한 제주 4·3의 의미를 교과서에서 교육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4·3이 새로운 결실을 얻어가는 배경에서 개정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사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그 위상이 하락하였고 한국사교과서는 8종으로 바뀌었다. 그 뒤 2010, 2011부분 개정 교육과정이 이뤄졌으나 제주 4·3

94) 박영기,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 :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95) 한운섭, 「4·3평화교육이 제주지역 개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과 관련하여 교과서 서술체제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표 14>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역사교과서
집필기준⁹⁶⁾

『한국사』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p>(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p> <p>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6·25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시기는 8·15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p> <p>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p> <p>②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참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본다.</p>	<p>(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p> <p>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시기는 8·15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p> <p>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 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p>

9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11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2011.

	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4·3 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
--	--

2009·2011교육과정에서는 그 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집필자의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교육과정 대강화에 따라 포괄적인 서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 4·3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 교육과정보다 더 대강화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제주 4·3에 대해 서술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8·15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라는 부분으로 정부 수립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주 4·3을 서술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집필기준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제주 4·3을 서술하라는 서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집필기준에는 제주 4·3이 명시되면서 이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⁹⁷⁾ 집필기준에서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라고 서술하여 제주 4·3의 성격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4·3은 정부의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사건의 해석이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인데 집필기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부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집필자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서술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제주 4·3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9·2011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한국사 교과서는 8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제주 4·3 서술에서 2007·2009교육과정보다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서술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2009·2011교육과정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 지학사, 두산동

97) 한철호, 앞의 논문, 2018, 146~147쪽.

아, 비상교육, 미래엔, 금성출판사, 천재교육이 있다.98) 그런데 검인정체제로 인해 오히려 시대적 흐름과는 역행하는 관점의 교과서 서술이 등장하였다.

<표 15>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p>교 학 사 99)</p>	<p>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 4.3 사건).</p>	 <p>▲ 제주 4·3 사건 때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여 심문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p>
	<p>더 알아보기 · 공산 빨치산(조선 인민 유격대)의 활동</p> <p>공산 빨치산은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진 무장 게릴라 세력을 일컫는다. 한반도에는 해방 직후 남로당의 활동을 통하여 전투적 성격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지지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공산 빨치산을 지휘하기 위하여 1949년 7월에 조선 인민 유격대를 창설하였고, 그 책임자로 박헌영과 이승업을 임명하였다. 또한, 북한은 강동 정치 학원에서 양성한 빨치산 약 2,400명을 1948년부터 1년여 걸쳐 파견하여 남한 빨치산에 합류시켰다.</p> <p>6·25 전쟁은 북한군이 남침하고 남한의 빨치산이 후방을 교란하는 협동 작전이었다. 북한의 남침은 빨치산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교통이 차단되어 북한으로부터 고립된 북한군과 빨치산은 1951년 지리산에 이현상이 지휘하는 남부군을 두기로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빨치산의 정치적 중심인물이었던 박헌영과 이승업은 미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북한에서 처형을 당하였다. 빨치산은 북한의 조지를 지지하고 이현상을 평당원으로 강등시켰다. 1953년 9월에는 빨치산 지휘부인 제5 지구대가 북한의 지시에 의하여 해체되고 이현상은 사망하였다. 남한 군경에 의한 토벌에서 살아 남은 빨치산은 1964년까지 활동하였다.</p>	

교학사 교과서는 2009·2011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서술하였다. 교학사 교과서는 뉴라이트적 역사인식에 기반을 두었다고 평가받으며 수많은 사실 오류만으로도 우선 탈락해야 할 교과서로 검정을 통과하자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서 많은 반발을 받았다.100)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제주 4·3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다. 사건의 배경인 3

98) 이하 교학사, 리베르, 지학사, 두산, 비상, 미래엔, 금성, 천재로 약칭.
 99) 권희영 외 5인, 『한국사』, 교학사, 2014, 305, 312쪽.
 100) 김정인, 「뉴라이트의 등장과 <한국 근·현대사>교과서 파동」, 『우리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271쪽.



· 1절 발포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사건의 경과 및 피해사실 서술도 편향적이다. 특히 정부세력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주 4·3 당시 정부쪽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그 피해정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서술하여야 하는데 마치 대등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서술하여 제주 4·3의 의미를 흐리고 있다. 어디까지나 제주 4·3은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 폭력이라는 관점이 기본인데 여기에는 그러한 관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진자료를 보면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당시 정부의 강압적인 진압방식을 감추고 있는 듯한 서술을 취하고 있으며 당시 정부의 넓은 포용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주 4·3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일절 서술하지 않고 있다. 사건이 현재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더 알아보기 코너 <공산 빨치산(인민유격대)>의 활동에서 제주 4·3 자체를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지지하는 사건이라고 서술하면서 아예 잘못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위험성이 크다. 교과서의 서술이 미흡한 정도를 넘어서 아예 왜곡된 내용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최근 성과의 반영이 거의 없고 과거 국사교과서와 같은 편향적인 관점으로 내용을 서술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오히려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으로 서술이 정체되었던 2007·2009 개정 교과서가 괜찮아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과서이다. 현재까지 진상규명 등을 통해 정립된 제주 4·3의 관한 사실정도는 교과서에 객관적으로 서술해 주어야 한다. 편향적인 관점으로 서술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과서의 내용은 역사교육에 부적절할 것이고 제주 4·3 교육에 있어서 이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직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사건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밝혀진 제주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제주 4·3 서술이 상대적으로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교과서들이다. 이 교과서들은 교학사와 비교하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잘 서술하였지만, 조금씩 다른 범위에서 서술의 아쉬움이 있다.

<표 16>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리베르·지학사·두산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

리 베 르 101)	<p>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다</p> <p>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미군정은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다.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p>	 <p>서북 청년회 1946년 남한으로 넘어온 이북 5도의 청년들이 결성한 우익 반공 단체이다. 제주 4·3 사건의 진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p>
	<p>도움말 제주 4·3 사건과 진상 규명</p> <p>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한 토벌대는 제주도민을 소개(疏開)시킨 뒤 130여 개 마을을 불태웠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에는 169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니 3분의 2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는 공산주의자 이외에 양민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주 4·3 사건은 오랫동안 진상 규명이 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2000년 1월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진상이 규명되었다. 이 법안은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청(서북 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희생자를 2만 5,000~3만 명으로 추정하였다.</p>  <p>제주의 학교 운동장에서 무장대 협력자를 가려내는 심문반</p>	
지 학 사 102)	<p>총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남조선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었다. 정부는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제주 주민의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충돌로 일부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연기되기도 하였다(제주 4.3 사건).</p>	<p>제주 4·3 사건의 발발과 전개</p> <p>1947년 제주도 3·1절 기념식 참가자들의 가두시위를 응원 경찰들이 경찰서 습격으로 잘못 판단하여 발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이후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의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제주 4·3 사건 위원회가 인명 피해 실태를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신고는 10,715건이었으며 행방불명자 신고도 3,171명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는 제주 4·3 평화재단도 만들어졌다.</p>

<p>두산동아 103)</p>	<p>단독 정부 수립 반대의 분위기가 고조된 1948년 4월 무장봉기가 확산되어 좌익을 중심으로 한 무장 유격대는 미군 철수,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경찰, 군인 및 우익 청년단체와 맞섰다. (제주 4.3 사건) 이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고,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두 곳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p>	 <p>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제주)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희생자는 25,000명에서 30,000명에 이른다. 당시 제주도민은 약 28만 명이였다. 2003년 정부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 사과하였다.</p>
------------------	--	---

<표 16>의 3종의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와 비교해서는 제주 4·3 관련 서술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연구 성과의 반영측면에서는 조금씩 아쉬운 점을 지니고 있는 교과서이다. 리베르의 경우는 제주 4·3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 전달은 잘 이루어졌지만 최근의 성과 측면에서 특별법 이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학사의 경우는 진상조사보고서와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는 건너뛰고 2008년 평화재단에 대해서 서술하는 등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두산은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까지 언급하는 등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최근의 성과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발 원인인 3·1절 발포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전달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주 4·3에서 3·1절 발포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므로 반드시 서술되어야 한다.


3종의 교과서는 서술에서 조금씩 미흡한 점이 발견되지만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알 수 있다. 특히 두산동아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최근의 성과를 서술하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교과서들이 지적받았던 것과는 반대로 발발 원인인 3·1절 발포사건을

101) 최준채 외 4인, 『한국사』, 리베르, 2014, 338쪽.
 102) 정재정 외 7인, 『한국사』, 지학사, 2014, 349쪽.
 103) 왕현중 외 6인, 『한국사』, 두산동아, 2014, 270쪽.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보충자료를 통해 서라도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도세력 측면에서도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쓴 리베르와 지학사와 달리 두산은 좌익을 중심으로 한 무장 유격대라고 표현하는 등 서로 다른 측면으로 서술의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그 밖의 서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3종의 교과서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소한으로 반영된 교과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교과서들은 제주 4·3 서술에 있어서 최근 성과를 반영한 교과서들로, 사건의 내용 전달이 잘 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표 17>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비상·미래엔·금성·천재 교과서의
제주 4·3서술**

비상교육 104)	<p>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이 일어났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이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제주 4.3 사건). 이로 인해 제주도 3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를 치르지 못하였고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p> <p>제주 4·3 사건</p> <p>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발생한 좌익 세력의 무장봉기 이후 1954년까지 7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광복 이후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대회가 열렸다. 이때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 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분노한 제주 도민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종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 미 군정과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이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3년 정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제주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였다.</p> <p align="center">◎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 도민들</p> 
미래엔 105)	<p align="center">제주 4.3 사건이 일어난다</p> <p>제주도의 3.1절 기념 행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다 (1947. 3. 1.).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반인이 체포되자,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좌익 세력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p>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 4. 3.). 미군정은 무력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제주 4.3 사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종결되었다(1954.9.).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 제주 4·3 평화공원 모자상 제주 4·3 사건 때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하여 당시 제주 주민의 10%가 넘는 2만 5천~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속으로 제주 4·3 사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청(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보고서(2003) -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 4·3 사건을 재조사했고, 2005년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져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남한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은 제주도였다. 1947년 삼일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제주도민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제주도민들이 크게 반발하였는데, 미군정청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 단체는 오히려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제주 4,3 사건). 무장대는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공격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삼아 저항하였다. 제주도의 무장봉기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 경찰 지서와 우익 대거 줄인 제주도민들 제주 4·3 사건 당시 심문을 받기 위해

*** 제주 4·3 사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5·10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소는 1949년에 실시되었다.

금성출판사 106)

제주 4·3 사건, 그리고 평화와 인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 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표문(2003. 10. 31)-



제58주년 4·3 희생자 위령제에서 묵념하는 노무현 대통령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0년에는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하였다.

천
재
교
육
107)

1947년 3.1 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 사건). 무장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 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 3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1948년에는 좌익 세력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아래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에는 국민 보도 연맹을 조직하였다.

*국민 보도 연맹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인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된 반공 단체이다. 6·25 전쟁 때 보도 연맹원의 상당수가 군경에 의해 학살되었다.

생각·넒·히·기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제주 4·3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넘도록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이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시작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는 2003년 국가 공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 유린과 과오가 있었음을 지적한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 사과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피해자들에게 국가 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 평화·인권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역사적 교훈을 들려주기 위해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을 만들어 2008년 개관하였다.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http://www.jeu43.go.kr>

제주 4·3 사건 형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더 알아보자.

◀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 모습(2008)

01. 냉전의 한계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309

104) 도면희 외 7인, 『한국사』, 비상교육, 2014, 351쪽.
105) 한철호 외 7인, 『한국사』, 미래엔, 2014, 312쪽.
106) 김중수 외 7인,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369쪽.
107) 주진오 외 8인, 『한국사』, 천재교육, 2014, 309쪽.

4종의 교과서는 이전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개선된 교과서이다.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정된 제주 4·3의 발발 배경, 전개과정, 결과, 성격 등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주 4·3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인정 및 사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주 4·3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행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주항쟁 이후 이루어지던 4·3 진상규명은 2003년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진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어졌다. 그리고 정부의 사과 이후 제주 4·3 서술에서는 그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교과서에 서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4종의 교과서는 본격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집필진의 성향이 제주 4·3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 교과서를 제외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은 것과 달리 4종의 교과서에서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로 제주 4·3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발발 원인, 전개과정 및 결과 성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는 등 제주 4·3과 관련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별로 최근 성과 반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래엔은 제주 4·3의 구체적인 희생자 수치와 특별법 이후 만들어진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금성출판사는 교과서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전문을 서술하여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천재교육은 평화 인권 교육의 장인 4·3평화기념관의 설립을 서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 4·3의 최근 성과들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무효화되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이다. 이러한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제주 4·3 서술의 특징

구분	특징
교학사	최근의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과거와 같은 편향적인 관점으로 제주 4·3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음
리베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은 이루어졌으나 제주 4·3에 대한 최근성과가 특별법까지만 서술하고 있음
지학사	리베르와 비슷하나 2008년 제주 4·3 평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다만 중간에 진상조사보고서는 건너뛴
두산	2003년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는 서술하였으나 제주 4·3의 발발 배경인 3·1절 발포사건을 서술하지 않음
비상	제주 4·3의 기본내용을 설명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까지 서술하고 있음
미래엔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 이후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제정을 설명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이후의 사회적인 움직임을 서술하고 있음
금성	국가폭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사과의 전문을 서술하여 제주 4·3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천재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이후 화해와 상생을 위한 평화기념관 개관과 4·3 위령제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음

제주 4·3은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관련 연구가 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등장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교과서 서술에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까지 제주 4·3의 성과를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관련 연구가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을 넘어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과 연관이 있다. 무엇보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무효화되면서 현재까지 서술되고 있는 교과서이므로 여기서는 특별히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 보려 한다.

먼저 제주 4·3의 기본적인 내용 전달은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교학사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주 4·3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본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규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전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학생들의 제주 4·3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 여전히 제주 4·3을 민

주항쟁 이전 역사교과서에서 서술하던 대로 공산주의 무장폭동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같은 최근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옛날부터 이어져오던 관점으로 제주 4·3을 서술하는 것이다. 극도로 편향된 관점을 보이고 있으며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내용면에서 역사교과서답지 않은 서술을 보이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학생들이 제주 4·3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두산동아의 경우에는 제주 4·3의 발발 원인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마다 다양한 차이가 존재했다.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이 아예 언급되지 않은 교과서(교학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까지만 서술한 교과서(리베르, 지학사) 국가폭력에 의한 정부의 사과까지 서술한 교과서(두산동아, 비상교육, 미래엔,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등 교과서에 따라 언급하는 시기가 각기 다르다. 제주 4·3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상규명과 관련한 성과의 언급이 중요한 것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최근의 성과가 반영되도록 교과서를 서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제주 4·3이 단순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모범적 사례를 교과서에 서술한다면 제주 4·3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의 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진상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충분히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집필진의 성향에 따라 내용 서술도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 바람직한 제주 4·3 서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모든 교과서에 제주 4·3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 뒤에는 진상조사보고서 이후의 실질적인 성과들도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4·3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여겨지는 만큼 적극적인 서술개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 4·3이 교육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등 제주 4·3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교과

서 서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나타났다. 2017년 제주도교육청에서 발표한 4·3집필기준안에 따른 교과서 시안이 그것이다. 4·3집필기준안 교과서 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중시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 정립된 제주 4·3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사건의 발발 원인, 전개과정, 민간인희생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 4·3의 발발원인인 3·1절 발포사건의 희생자 수, 제주도민들의 총과업 비율, 총과업으로 체포당한 제주도민의 수 등, 그전에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만 언급되는 정도였던 것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상세하게 설명하였다.¹⁰⁸⁾ 이는 보다 정확한 서술을 하여 사건의 전개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는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고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제주 4·3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제주 4·3 진상규명과정을 교과서에 직접 서술하고 가장 최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4·3 희생자 추념일의 법정기념일 지정까지 교과서에 서술하여 사건의 성격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주 4·3으로 갈등을 겪던 집단들이 화해하는 내용을 서술하면서 진실 규명과 치유를 통해 제주 4·3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심했던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 신장으로 나아가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다.¹⁰⁹⁾ 이는 제주 4·3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제주 4·3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제주도교육청에서 발표한 4·3집필기준안 교과서 시안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교과서 서술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상으로 보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하여 학생들이 제주 4·3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주 4·3서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 발표한 4·3집필기준안이 실제 교과서에 반영되기에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과서 내의 서술 분량의 문제이다.

역사교과서는 한정된 분량으로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모

108) 제주도교육청,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2017, 83쪽.

109) 제주도교육청, 앞의 연구, 2017, 85쪽.

든 내용을 서술할 수 없다. 4·3 집필기준안은 본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한데 이렇게 되면 교과서에 서술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필기준안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교과서 본문 내용의 서술을 줄이고 교과서 날개단과 같은 보충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교과서 서술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주 4·3 서술 방식으로 최대한 교과서 지면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교과서를 단순히 글로만 서술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글 이외에도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면 더욱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 4·3과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구성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제주 4·3 서술을 이루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진상규명과정을 통한 제주 4·3의 성격 변화를 표 같은 것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제주 4·3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고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과서 서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영상자료를 수업 중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출판사에서 교과서의 추가 학습자료 등으로 영상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교사의 역량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교사가 직접 관련 영상을 구해오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한정된 분량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교과서의 약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역사수업에는 단순히 교과서만 활용하는 과거의 수업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므로, 영상 자료를 추가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교과서를 아무리 잘 서술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으므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바람직한 제주 4·3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제주 4·3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생생하게 받아들여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한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주 4·3을 활용한 탐구활동 제작이 있다. 다양한 보충자료를 제

시하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지만, 학습효율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충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의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료를 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나 생각 등을 말하게 하거나,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신문 만들기를 하는 등 탐구활동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탐구활동은 학생들에게 질문이나 과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학생들은 탐구활동을 통해 교사가 전달해주는 수업내용을 자신 스스로의 방식으로 학습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제주 4·3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과서에 제주 4·3을 활용한 탐구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주 4·3 진상규명에 진전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서술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제주 4·3은 시대가 흐르면서 국가에 대항하는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는 이미지에서 국가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변화하는 등 편향적인 관점에서 점차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계속되는 진상규명으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II장에서는 진상규명운동이 일어나면서 점차 변화하는 교과서의 제주 4·3 서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거 진상규명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주 4·3은 반공주의 사상이 강했던 시대적 배경하에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고 여겨졌으며, 교과서에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오랫동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제주 4·3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2003년에 4·3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면서 제주 4·3은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국가폭력이라고 공식 인정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제7차교육과정부터 검인정 체제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등장하면서 제주 4·3 서술은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공산주의 무장폭동이라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사라졌으며, 주민희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III장에서는 제주 4·3이 공인된 이후 변화하는 제주 4·3 진상규명과 교과서 서술의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제주 4·3은 진상조사보고서를 비판하는 보수세력과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다행히도 보수세력의 계속된 공세는 재판을 통해 막을 수 있었지만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사라지고 제주 4·3 서술이 과거보다 퇴보하는 등 제주 4·3은 많은 시련을 겪었다. 특히 진상조사보고서의 성과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는 분위

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극복되고 진상규명의 결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주 4·3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화해와 공존이라는 가치를 알려주는 현재적 사건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교과서에도 영향을 미쳐 진상조사보고서가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었고 이를 통해 제주 4·3의 성격이 과거와 비교하여 명확하게 서술되는 발전을 이루어냈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제주 4·3 서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과서 서술과 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식 및 연구 성과를 연계하여 통시대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과거 제주 4·3에 대한 인식 및 연구 성과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교과서 서술도 자연히 미흡하였고 현재 제주 4·3에 대한 인식 및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 교과서 서술 역시 과거와 비교하여 발전하였다.

무엇보다 제주 4·3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끼치는 4·3 진상규명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및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55년만에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등 진상규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현재까지 4·3 진상규명 및 연구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제주 4·3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과 연구 성과 등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2017년에 4·3 7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는 이제까지의 4·3 연구 성과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앞서서도 설명했던 제주 4·3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4·3은 말한다』와 제주 4·3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연구한 4·3 진상조사보고서가 각각 언론기관과 정부라는 주체를 통해 연구되었다고 한다면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는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편찬한 것으로 제주 4·3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서 나타낸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제주 4·3 연구의 전문화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4·3 진상규명운동에 관한 것들이 잘 정되어 있어 제주 4·3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 4·3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통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제주 4·3 진상규명 및 연구가 과거에 비해서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4·3 진상규명 및 연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가는 사회적 배경에 비해서 교과서 서술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지 10여년이 지나서 출판된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여전히 제주 4·3을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서술하는 교과서가 등장한 것이다. 제주 4·3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만 교과서의 서술은 연구의 발전을 완전히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서술이 과거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최근의 성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제주 4·3은 단순히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좁은 의미의 성격규정 단계를 넘어 화해와 상생, 평화와 공존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제주 4·3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과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향의 서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진상규명과정의 최근 성과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진상조사보고서 이후에도 4·3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추모 사업 및 유가족 복지사업 진행, 경우회와 피해자 유족회의 화해 선언, 군경과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위령비 같이 모시기 등 제주 4·3의 진상규명은 실질적인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거의 서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제주 4·3 서술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제주 4·3 서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주 4·3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교과서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서술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받는다 해도 단순히 글로만 서술해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날개단 등을 활용하여 보충자료를 제시하고,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추가적인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며,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제주 4·3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제주 4·3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서술을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제주 4·3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주 4·3은 진상규명과정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대립이 심했던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 신장으로 나아가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서술되는 역사교과서에서는 바람직한 제주 4·3 서술을 위해 최근의 성과들을 적극 반영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충자료 및 탐구활동을 활용한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과서에서 제주 4·3 서술을 보완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바람직한 제주 4·3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교과서>

- 문교부, 『국사』, 대한교과서, 1970.
- 국사 편찬 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 『국사』, 대한교과서, 1980.
- 국사 편찬 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83.
- 국사 편찬 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90.
- 국사 편찬 위원회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96.
- 김광남 외 4인,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4.
- 김종수 외 3인,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2004.
- 김한중 외 5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4.
- 김홍수 외 5인,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 2004.
- 주진오 외 4인,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 한철호 외 5인,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4.
- 도면희 외 6인, 『한국사』, 비상교육, 2011.
- 이인석 외 5인,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 정재정 외 4인, 『한국사』, 지학사, 2011.
- 주진오 외 7인, 『한국사』, 천재교육, 2011.
- 최준채 외 4인, 『한국사』, 법문사, 2011.
- 한철호 외 5인, 『한국사』, 미래엔컬처, 2011.
- 권희영 외 5인, 『한국사』, 교학사, 2014.
- 김종수 외 7인,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 도면희 외 7인, 『한국사』, 비상교육, 2014.
- 왕현중 외 6인, 『한국사』, 두산동아, 2014.
- 정재정 외 7인, 『한국사』, 지학사, 2014.
- 주진오 외 8인, 『한국사』, 천재교육, 2014.

최준채 외 4인, 『한국사』, 리베르, 2014.

한철호 외 7인, 『한국사』, 미래엔, 2014.

<저 서>

김기봉,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김태웅 외, 『우리 역사,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 아카넷, 2014.

김한중 외,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박윤식, 『참혹했던 비극의 역사 1948년 제주 4·3사건』, 휘선, 2011.

박찬식, 『4·3의 진실』, 제주 4·3평화재단, 2010.

브루스 커밍스 저·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송상현, 『역사인식의 논리와 역사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양정심, 『제주 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양호환 편,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동향』, 책과함께, 2011.

양호환,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2012.

이병승 외, 『쉽게 풀어 쓴 교육학』, 학지사, 2016.

이찬희·박진동, 『한·일역사과 교육과정 비교연구』, 경인문화사, 2010.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2008

전영준,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사학과, 2016.

정기문 외, 『역사학의 성과와 역사교육의 방향』, 책과함께, 2013.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1~5, 전예원, 1998.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제주 4·3평화재단,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2017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교육과학사, 2011.

<논 문>

- 강민희,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제주지역사 교수-학습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강선주,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역사교육 97, 역사교육연구회, 2006.
- 고경민, 「제주 4·3진상규명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 ,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건과 과제」,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2013.
- 고성만, 「제주 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5, 2005.
- 김은희,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4·3과 역사』, 제주 4·3연구소, 2011.
- 김정인, 「뉴라이트의 등장과 <한국 근·현대사>교과서 파동」, 『우리역사교육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5.
- 김종민, 「법정에 선 4·3」,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2017.
- 김창후, 「4·3 유적의 복원」,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2017.
-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8.
- 박경훈,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2017.
-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4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 , 「4·3진상규명운동의 태동과 좌절」,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2017.
- 윤철수, 「대학가의 4·3운동」,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2017.

- 임종명,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현대사 서술과 민족·국가·대한민국」, 『역사와 교육』13, 역사와 교육학회, 20011.
- 임하영,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변천과 쟁점」,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 장윤식, 「4·3유해의 발굴」,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2017.
- , 「4·3의 해원과 화해」,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2017.
- , 「추념일 지정과 추념식 봉행」, 『(제주 4·3 70주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4·3 평화재단, 2017.
-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12-2,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5.
- 한철호,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사학연구』, 103, 한국사학회, 2011.
- ,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사건 서술과 집필 방향」, 4·3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제주 4·3사건과 세계의 제노사이드 현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제주연구원, 2017.
- 허은철, 「제2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발행과 서술변화」, 『역사와 교육』 24,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17.

<기타자료>

제주도교육청, 『제주 4·3 집필기준안』, 2017.

<온라인 자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Abstract>

The trends in the truth investigation of Jeju 4·3 and
change in descriptions of history subject

Yang, Yu-Seok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eong-pil

From the past until today, the social perception of Jeju 4·3 has changed by the efforts of citizens requiring the truth. Because this change is especially correlated with different depictions in different textbooks, this paper will discuss how the description of textbooks is changed whe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truth changes the general view, and will further suggest a better way to illustrate Jeju 4·3. As a result, in history textbooks, Jeju 4·3, which was described as a communist uprising has now changed to an event of National Violence where innocent lives were taken. The continued process of identifying the truth eventually leads to the clear understanding of Jeju 4·3.

However, the depiction of Jeju 4·3 in history textbooks fails to depict the full aspect of this event. Currently, Jeju 4·3 does not on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eath of many innocents, but now extended to pursue universal human qualities such as reconciliation, peace, and peaceful coexistence. The characteristics of Jeju 4·3 descriptions is mainly determined by the results of the on-going research, Therefore the descriptions of such events in textbooks should change accordingly to the research and the following social perception.

For textbooks to change, the recent inquiry of Jeju 4·3 must be fully reflected. Presently, the identification of truth shows the practical result. However, these products are nowhere to be seen in history textbooks. This phenomenon fails to meet for the purpose of accurately depicting Jeju 4·3 and thus, an effort to improve the descriptions.

Most importantly, for a desirable describe of Jeju 4·3, textbooks should be made in such a way that students feel comfortable encountering the event. The use of different interactive studying tools helps students be more engaged in the topic and would thus create the education more effective.

Jeju 4·3 is an important exemplar of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 that overcame one of the most conflicting ideas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of truth, and is now reaching for peace and increasing human rights. Therefore, any further history textbooks should formate textbooks in a way where students are able to better understand, and incorporate current inquiry to teach Jeju 4·3 more effectively. As the researcher thinks, if these guidelines are followed, the future education of Jeju 4·3 would be superior compared to the education in the past.